

공동포럼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Cooperative Identity
A People-Centered Path for a
Second Cooperative Decade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아이쿱신길센터 4F 배우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공동주최: 사회적경제연대포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주관: 윤호중 의원 · 고용진 의원 · 강은미 의원 · 민형배 의원 · 용혜인 의원

공동포럼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2020년 11월 30일(월) 10시~13시

아이쿱신길센터 4F 배우락

시간	프로그램	비고
09:00 ~ 10:00	등록	
10:00 ~ 10:10	국민의례 · 인사말 · 축사	
주제발표		
10:10 ~ 10:30	발표1: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 -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중심으로	송재일 교수 명지대 법학과
10:30 ~ 10:50	발표2: 협동조합과 조합원 거래의 성격과 세제 개선방향	유종오 회계사 인성회계법인
10:50 ~ 11:10	발표3: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비 분할적립금 세제 도입방안	이한우 세무사 세무법인 화우
11:10 ~ 11:30	발표4: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내용과 개편	이종제 회계사 협동조합공작소
11:30 ~ 11:40	중간휴식	
패널토론		
11:40 ~ 12:20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이선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12:20 ~ 12:40	종합토론	

※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사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공동대표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연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입니다.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포럼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귀한 걸음해주신 참석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뜻을 모아 함께 해주신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와 고용진.강은미.민형배.용혜인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가와 구성원들이 노력해주신 결과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택문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가치들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정부도 올해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동조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만이 비영리법인으로 특정되어 일반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영리회사와 동일한 세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 형태와의 과세 형평성을 검토하여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조세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원 권익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나온 내용을 경청하여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 발표를 맡아주신 송재일 교수님, 유종오 회계사님, 이한우 세무사님, 이종제 회계사님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명한석.정순문.이선민 변호사, 기획재정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많은 고견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고명희

2020년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과 매우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명백해졌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영역이 조명받았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측면이 조명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입니다. 자연의 보전과 생명의 보호라는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구성원들의 경제적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잘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지니는 기업혁신의 잠재력과 사회혁신의 힘은 생태적 기술을 적용하고 사람들의 재능을 발현시키며 그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과제를 잘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낱알이 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거리는 멀어져가고, 현장에서 협동조합인들이 겪는 세제 상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포럼을 통해 영리와 비영리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이 영리회사나 비영리조직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영리 혹은 비영리로 재단하여 그 기준에 협동조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목적과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후 상호적인 속성, 영리적인 속성, 공익적인 속성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포럼을 준비해주신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국회의원 분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후 더욱 발전적인 논의들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공동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 주관해주시는 윤호중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이쿱의 오랜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 사회 더 널리 퍼져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한 유지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영리, 비영리라는 단편적인 이분법적 질서에 가두지 않으면서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제한 없이 시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바탕이 튼튼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법 제도에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특수법인의 등록이 불가능하고, 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건설업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공공조달이나 자금 지원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장애인 기업이 대상에 제외 되어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같은 혼란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법제상 영리 법인을 다루는 상법, 비영리 법인을 다루는 민법으로 나뉘는데, 협동조합의 경우 조직 형태는 상법을 따르면서 운영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이중 제약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이윤이 아닌 이용을 목적으로 출자금의 크기에 관계 없이 1인 1표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또 1인의 총 출자금이 전체 규모의 30%를 넘을 수 없고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은 적립을 우선하는 비분할 자본입니다. 또 배당을 한다 해도 이용 실적에 비례해 환영하는 이용배당이 먼저이기 때문에 영리 법인과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그 자체로의 정신이나 운영원리가 현행 제도에 배치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추후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민형배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럼을 함께 준비해주신 동료 의원님,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송재일 교수님, 유종오 회계사님, 이한우 세무사님, 이종제 회계사님과 열띤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나눕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거래는 일반 영리기업의 이윤추구 활동과는 다르다 봅니다. 조합원들의 경제적 필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조합의 잉여에 대한 예외 없는 법인세 과세가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협동조합의 세제혜택과 조세 차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제성장에 있어 ‘포용성장’과 ‘사람중심경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 기존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포럼에서 나온 논의와 제안이 협동조합 세제 개편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강은미 의원님과 민형배 의원님, 그리고 포럼을 제안하고 내용을 기획하신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세상을 덮치고 나니 뉴노멀, 포스트코로나 같은 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전쟁 같은 일상을 견디는 대다수 시민에겐 딴 세상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돌봄’ ‘참여’ ‘신뢰’ 같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의 논리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제3의 경제, 즉 사회적 경제 영역의 중요성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이끄는 핵심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관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에 확고한 자기 영역을 가지고 뿌리내릴 때, 사회경제학자 칼 폴라니가 경고한 “인간과 자연이 악마의 맷돌에 갈려나가는 비극”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사회적 경제 보호와 육성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규율하는 여러 법제도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럼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법제가 체계적이지 않아 협동조합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세제가 협동조합의 특성과는 잘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큼니다.

향후 세제 개편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이 조세 회피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협동조합 스스로 연구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이 포럼의 큰 의미입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포럼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잘 검토하고 세제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지나간 자리, 뉴노멀이란 이름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만 커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을 기회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경제로 전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전환의 한 축이 기본소득이라면 다른 한 축은 협동조합이라 믿습니다.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응원하며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 -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중심으로	13
협동조합 조합원 거래의 성격과 세제 개선방향	33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방안	55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내용과 개편	79
<보론> 협동조합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99
<보론> 주요국의 협동조합 조세 제도	119
토론문	137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 -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중심으로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목차>

- I. 서론
- II.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
- III. 조합원의 사업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IV. 제도개선을 위한 관점과 전망
- V. 결론

I. 서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 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방식은 일반기업과 다른 협동조합만의 독특한 성격으로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조합원의 목적과 협동조합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즉 이용자로서 조합원이 중심에 있고, 이러한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 형태에 해당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한층 더 발달하여 국가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도모하고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와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 정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법인의 성격에서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며,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원외 거래)에 대한 인식의 한계, 협동조합 회계의 독자성이나 적립금의 특성을 더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제도 개선을 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해외 사례도 살펴야 하지만, 사회경제시스템이 나라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사사례도 살펴 실무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우리만의 협동조합 법제도가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미래 사회의 협동조합을 전망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특성을 먼저 살핀 다음(제2장), 조합원의 사업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제3장).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관점과 전망(제4장)을 음미한 다음, 결론에 이르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려 한다.

II.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

1. 조합원의 필요 충족

협동조합(協同組合)은 세상에 없던 것이었는데, 인간이 발명한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이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라 할 수 있으며,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s Association, 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이용자소유기업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을 말하며, 협동조합 연합회 단계의 조합원은 회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체로서 인적 결합체인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이며, 운영자가 된다.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본의 일부만 출자할 뿐 주식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주식회사를 이용할 의무도 없다.

조합원은 단순히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이익을 얻는 피동적 구성원이 아니라 직접 일정한 목적사업을 협동으로 영위하고 그 결과로써 일정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권익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그와 같은 활동을 영위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말한다. 한편 비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개인·단체나 법인을 불문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이러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컨대, 조합원이 소유자, 통제자, 수익자라는 점에서 이용자소유기업(POF)로서 투자자소유기업(IOF)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3. 조합원의 사업이용과 협동조합 법인

지금까지는 기존의 8개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기존의 협동조합법제하에서는 1차 산업 및 금융, 소비 부문의 협동조합만 설립이 가능하였는데, 오늘날에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분야에

서의 협동조합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법제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8개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외에 협동조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1> 법인의 법적 근거

상법상 법인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기본법상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개별협동조합)	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체계 하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많은 제약에 따랐다.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다른 기존의 법제(민법과 상법)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무한책임, 대표교체가 어려워 민주적 운영 어려움, 공신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출자비례의결권(1주1표)에 따른 저소득층 등의 사업참여 어려움, 지분거래를 통한 경영권 문제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 방식에서의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Ⅲ. 조합원의 사업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본법과 개별법 협동조합

2012년 이전에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은 국가의 산업정책적 필요와 민간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개별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만들어 왔다.

<표 2> 우리나라 협동조합 관련 법률

구 분	산업	협동조합	근거법	제정년도	소관부처
생산자 협동조합	1차산업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1957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해양수산부
		업연초조합	업연초협동조합법	1963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1980	산림청
소비자 협동조합	2차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3차산업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1972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1982	행정안전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	1999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1, 2, 3차 산업 기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2011	기획재정부

농업협동조합법(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 신용협동조합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등 8개 협동조합 개별법이라 부른다. 위 표에서 보듯이 특별법 형태의 8개 개별법으로만 제정되어 있어 8개의 특별법에 근거하여야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했고, 협동조합적인 방식에 따라서 운영되는 조직체라고 하여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또한 복지, 의료, 주택, 교육, 노동 분야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특별법상의 협동조합 설립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였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필두로 협동조합입법이 시작되었으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반면,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많은 공익활동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특별법상의 각종 협동조합법에서도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키워주지 못하였고,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영리, 비영리 논쟁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 개별협동조합법은 모두 조직과 사업에 관한 법규범을 담고 있다. 개별법에서 협동조합은 대체로 비영리법인으로 본 반면,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면서 그 법적 성격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하며,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이 행하던 사회적 목적사업을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와 관련 비영리법인성에 대하여 재무부의 입법설명자료에는 마치 협동조합이 영리법인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주류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협동조합을 한 법에 담고 있는 데서 나오는 내부모순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원리의 협동조합을 단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한 법에 두는 것은 향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의 생명인 민주성과 자율성이 국가에 의해 크게 훼손될 여지가 클 수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하여 영리법인으로서 성격을 부여하고 설립 신고주의를 통한 설립의 자유 보장 등 많은 혜택을 통해 되도록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 예컨대 상인, 나아가 대기업이 유사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존 8개 협동조합과 경쟁을 하는 경우, 기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깊은 성찰 없이 협동조합의 영리법인으로의 성격규정은 문제가 많으며,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1) 유럽의 협동조합은행

유럽에서 예를 들어 신탁은 조합원에 의하여 소유되기 때문에 소유자와 이용자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신탁의 조합원은 총회의 구성원이고, 이사회 구성원의 선거에 참여하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1인 1표에 기초해 있다. 협동조합의 출자증권은 거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탁의 자본금은 거의 내부유보금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협동조합은행과 일부 신탁에서의 자본은 궁극적인 소유자가 없는 “세대간 기금(intergenerational endow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탁의 자본은 현재의 조합원에 의하여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그 자체에 의하여 소유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탁의 경영자는 이러한 자본금의 세대간 이전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비영리조직적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 사례

20세기 초반 이래 **營利(but lucratif)**라는 기준은 **收益(bénéfices)**의 추구하고 분배로 전제되었다. 그러나 법에서는 별도로 **영리(bénéfice)**의 개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1914년 3월 11일 파기원 판결**¹⁾이 영리에 관한 유명한 정의를 내렸다. 이는 조합원에게 대부를 해준 신용협동조합인 ‘마니고 농촌금고(*la Caisse Rurale de Manigod*)’²⁾의 稅務(administration fiscale)와 관련된 사건이다.

‘마니고 농촌금고(*la Caisse Rurale de Manigod*)’의 재판상 자백(*déclaration*)뿐만 아니라, 파기원은 “조합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qui ajoute à la fortune des associés »)” 재정적 또는 물질적 혜택을 수익(*le bénéfice*)으로 정의했다. 이후 그 회원들에게 저축을 하게 하거나 지출을 회피하게 하는 모든 단체(*groupements*)에는 소시에떼 법인격이 원칙적으로 부여될 수 없었다. 이러한 수익 개념의 제한적 이해는 단체법인의 성질결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개입을 야기하였다. (**1947년 9월 10일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건축조합, 협동농장 소시에떼 등).³⁾

게다가 이는 새로운 법적 구조인 ‘경제이익단체(*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 GIE*)’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걸 허용하는데(**1967년 9월 23일 오도낭스**)⁴⁾, 이것은 중간법인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는 어떤 회사가 수익을 발생할 본질적 의도로 설립되지 않을지라도 정신적 친밀감(*personnalité morale*)을 주는 단체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격을 부여한다.

프랑스 민법전 제1832조를 개정한 **1978년 1월 4일 법률**은 “또는 이윤을 분배하기로(« ou de profiter de l'économie »)”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윤의 실현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까닭이다.

3.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

비조합원과 연관된 활동은 협동조합은 그 정체성의 측면에서 조합원과 연관된 활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규율 문제를 야기한다. 윈크너는 “협동조합이 비조합원과 무제한으로 거래한다면, 조합원의 자조조직으로서 특성을 상실할 것이고 일반 기업으로 변질될

1) Cour de Cassation, Chambres réunies, du 11 mars 1914, Inédit.

2) 프랑스 알프스 산악지대(론 알프스 레지옹)에 위치한 라 오토 사부아 데파르트망(département de la Haute-Savoie)에 위치한 콤문(Commune)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형 실험. 출처 <http://www.manigod.com/>

3) (sociétés coopératives (loi du 10 septembre 1947), sociétés de construction, société d'intérêt collectif agricole, etc.).

4) le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ordonnance du 23 septembre 1967).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왜 협동조합이 법에 의하여 완벽한 상호성을 추구할 수 없는지에 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비조합원과도 거래한다는 것은 재화, 용역, 일자리의 조합원 기여의 부족분을 치유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다. 조합원 증대에 노력할 수 있다. 또는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을 주기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조합원 활동은 사전적으로 금지될 수 없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한편 협동조합이 상호성을 실현하는 데 자극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행 유럽 협동조합 법률의 규정을 따라, PECOL은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협동조합의 니즈와 정체성 보호라는 니즈를 결합하는 선에서 다른 기준을 찾아보았고, 따라서 비조합원 활동은 일정한 제한과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 즉 제1.4조에 반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비조합원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제2항). 비조합원 거래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비조합원에게 이용 조합원(cooperator members)이 될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항). 협동조합이 비조합원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그러한 거래의 별도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이익 협동조합도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제4항). 비조합원 거래로 인한 수익은 비분할 적립금(indivisible reserves)에 들어간다(제5항).

요컨대 PECOL은 일반협동조합의 조직규범만 다루고 있다.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는 일반이익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목적이 (주로) 상호부조가 아니기에 그러하다. 유럽연합협동조합법제(PECOL)에서도 비조합원이용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입법자들이 긍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1.5조(비조합원 협동조합 거래)

- (1) 비조합원 협동조합 거래(Non-member cooperative transactions)란 협동조합과 비조합원 간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재화, 용역 또는 일자리의 공급을 위한 거래를 말한다.
- (2) 제1.4조에 반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비조합원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3) 비조합원 거래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비조합원에게 이용 조합원(cooperator members)이 될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협동조합이 비조합원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그러한 거래의 별도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이익 협동조합도 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
- (5) 비조합원 거래로 인한 이익은 비분할 적립금(indivisible reserves)에 들어간다.

<표 3> EU 국가별 협동조합의 원외이용 제한사항

구분	원외이용(제3자거래) 제한
오스트리아	정관에 따름. 단,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어야지 이익 추구여서는 안됨.
벨기에	허용
덴마크	일반적으로 미허용
핀란드	법률상 미허용. 단, 정관으로 명시한 경우 허용 가능.
프랑스	일부 협동조합은 미허용. 농협은 전체 매출액의 20% 이내
독일	허용
그리스	법률이 조합원에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분야만 허용.
아일랜드	허용
이탈리아	엄격한 룰은 없음. 신협은 '원칙적으로'는 미허용. 농협은 엄격히 제한.
네덜란드	허용
포르투갈	미허용이지만, 실제로는 용인
스페인	조합원 활동의 50%까지 허용. 그이상은 노동부 승인시 가능.
영국	농협은 전체 판매가의 1/3 이내. 원외이용 제한은 영국법상 정해져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많은 소비자가 회원이 아님.
SCE (EU)	미허용 (회원국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출처: EUROPA(b), *op.cit.*

한편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6조).

농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기본법과 달리 정관으로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58조). 또한 조합원과 동일 세대에 속한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조합원도 사업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제46조). 구체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에서는 비조합원 이용액을 조합원 이용액의 10% 이내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타 협동조합법이나 외국사례에 견주어 보면, 아주 엄격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다소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한다.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상당성과 합리성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제사업에 대한 규율도 제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4조). 개별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2는 공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필요하다.

요컨대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추세를 감안하여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기타 협동조합 세무 회계와 적립금 등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존재한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예, 회계기준, 평가기준, 사회적 가치평가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에 대하여 맞춤형 별도 입법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준용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사업자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에 적용하는 상법 조항을 준용하거나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법을 준용한다. 이에 관하여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협동조합별로 상이한 차별적 규제가 존재한다. 같은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도 주무부처와 근거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를 한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할 경우 세제 혜택 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IMF 이후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미 합리적인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예, 부동산 개발 임대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세율 부여하는데 이는 선진국 사례와 배치된다. 적어도 제조업 법인보다 고율이 되어야 적정한 자원배분과 부의 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하여 협동조합 세제를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방지, 소비자 후생 증진, 원가경영을 통한 조합원 혜택, 지역사회 기여 등 순기능을 감안하여 평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순기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걸맞는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경제 전체의 포용과 상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5. 소결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위한 협동조합의 조직구조와 사업전략에서 나아가 자본의 문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주식회사에 비하여 취약한 자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 금융 또는 기금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민주성과 상호성을 추구하지만 민주적 조직구조가 갖는 의사결정비용

(influence cost)가 영리주식회사에 비해 많이 발생하며, 주식시장과 같은 기업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자본조달에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단점이 라기보다 선택의 문제(즉 1인독재국가와 민주공화국; 1주1표와 1인1표 방식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부문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 금융을 통한 협업적 자본조달 법제를 마련한다든지 협동조합기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 하고 있다. 신탁 등 협동조합은행이 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쉽지 않아, 협 동조합기금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하였다(예, 2019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 대기금).

기존 개별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조달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다. 금융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개별협동조합(예,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협)에서는 법제 불비로 인한 법률리스크가 상당하다. 예를 들면, 최근 생협의 경우, 조합원 직접 자금은 법적인 안정성 취약으로 인해 유사수신이라는 법률리스크를 초래하기에, 이를 위해 우선출자주 제도, 투자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의결 권이 없는 우선출자(우선주 개념)제도를 도입하여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을 해소 하고 신규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출자는 자기 자본 또는 납입출자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만 우선출자 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유럽협동조합법제(PECOL)에도 이러한 점이 규정되어 있다.

제3.1조(협동조합 재무구조의 일반적 원칙)

- (1) 협동조합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영리(profits as the ultimate purpose)를 추구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법인(private legal persons)으로서, 보편적으로 승인되는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에 관한 목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specific) 재무 구조를 가진다.
- (2) 협동조합은 사업조직(business organisations)으로서,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지분(shares), 적립금(reserves), 대출 및 기타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활용하여 자본을 조성할 수 있다.

유럽협동조합법에서는 투자조합원에 관한 같은 규정이 있는데, 협동조합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람을 투자(비이용) 조합원으로 정관에서 승인할 수 있고, 투자조합원의 의결권 총수는 25%를 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2006년 개정된 독일 협동조합법에서도 협동조합 목적규정의 변경,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 용이화,

자본조달과 그 유지의 용이화 등을 위해 개정되었다. 자본조달의 용이화를 위하여 투자조합원 제도를 도입: 협동조합의 이용 또는 노동의 제공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각 조합은 정관으로 투자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 내의 복수국가에 걸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인 유럽협동조합법이 2003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동법을 바탕으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독일 협동조합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독일의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은 유럽협동조합법을 의식한 것이다.⁵⁾

IV. 제도개선을 위한 관점과 전망

1. 관점의 문제

미래학의 대가인 하와이 주립대학의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미래학의 3법칙이 있다고 한다.⁶⁾

- 제1법칙: 미래는 예언할 수 없다.
제2법칙: 다양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제3법칙: 선호하는 미래는 실현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미래는 미리 알 수는 없으나, 다양한 미래가 존재할 것이고 짐작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선호하는 미래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 미래를 예측하고, (2)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미래(가능미래)에 대비하여 현재 해야 할 일을 도출하고, (3) 많은 미래 중 우리가 원하는 미래(선호미래)로 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쳐 협동조합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복잡계라는 점에서 미래 연구에는 관점(觀點)의 정립이 중요하다. 관점(a point of view)이란 철학에서 사고의 특정한 진술된 방식이며, 어떤 개인적 견해로부터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의미상 동일한 단어는 견해(perspective)이다.

미래 준비를 하는 관점에는 관찰자의 관점과 참여자의 관점, 정적 관점과 동적 관점, 존재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등의 여러 대조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관찰자의 관점과 참여자의 관점은 주어진 사회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된다. 재판하는 법정을 예로 든다면, 원고와 피고의 관점이 참여자의 관점이라면 방청객의 관점은 관찰

5) 독일협동조합법제에서 정관자치의 내용은 齊藤由理子, “多様な組合員の意思決定への参加--独仏の協同組合の事例から”, 『農林金融』, 60(5), 2007, pp. 223-224 참조.

6) Dator, J. A. (2009), Alternative Futures at the Manoa School, *Journal of Futures Studies*, 14(2), 1-18.; 박성원, 미래공부, 글항아리, 2019.

자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조차 어느 한 쪽의 시각에서 충실히 생각해보는 태도에서 공감과 연대가 싹튼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종적인 몫은 사고의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심판이 가려진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다수결이든 설득작용이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리가 되는 반면, 관찰자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갈등상황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해결하기 힘든 미궁으로 빠져든다. 다음으로 정적 관점과 동적 관점은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적 관점은 현재만 고려하는 반면, 동적 관점은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사회변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려는 견해를 말한다. 입법으로 따지면, 벌금이나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정적인 관점은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반면, 동적인 관점은 물가변동이나 가해자의 소득 대비 몇 %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어떠한 관점이 더 사회변동에 적합한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끝으로 존재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은 사회변화에 따른 달라진 기능이나 역할을 고려하는가 하는 구분이다. 존재적 관점은 사회 주체의 역할을 고정하여 보는 반면, 기능적 관점은 사회 주체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잘 작동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는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예컨대 인구기준이나 광역시의 면 등의 잣대를 들이대 존재 자체를 규정하여 고정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존재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반면 기능적 관점은 도시 속의 농촌 기능, 농촌 속의 도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입법이나 행정을 펴 나가는데, 이럴 경우 도시농업이나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학문의 중립성이나 입법의 단순화, 집행의 편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관찰자, 정적, 존재적 관점을 중시하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는 좀 더 어렵더라도 사회변동이나 변화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참여자, 동적, 기능적 관점이 중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관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인 조합원은 조합사업에 참여하고 통제하며 투자하는 성격에서 참여적 관점이 훨씬 유용한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조합자본의 형성, 의사결정, 수익 분배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평가와 환류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의 관점은 수시로 변동되는 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쉽 없이 조합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협동조합은 물처럼 움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엄매이지 말고 기능적으로 조직구조와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미래 전망

(1) 디지털 경제의 문제점: 플랫폼 자본주의(데이터 독과점)

플랫폼(Platform)은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으로 향후 더욱 시장과 산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한 면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나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다수의 사용자를 플랫폼으로 모으고, 다른 면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주를 끌어들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Two-sided Platform이라고 한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한 회사는 AirBnB, Uber, Google, Facebook 등이 있고 국내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의 편의만 강조돼 노동자들의 불안정성, 분절화, 고립이 더욱 커지고, 시장의 독점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Super Digital Platform, 데이터 자본주의는 역설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은 대부분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임시계약직 경제(gig economy, 킥 경제)를 확산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데이터 감시와 수집을 조장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시장을 독점한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 소수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며, 이렇게 금전적 착취와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독점 구도가 형성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알고리즘을 통한 오류와 편향성이 플랫폼 자본주의를 통해 증폭되는 것이다. 알고리즘(Algorithm)은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크와리즈미(Al Khwarizmi)’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는 “컴퓨터 혹은 디지털 대상이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Goffey, 2008: 15)이다. 법학자 Lawrence Lessig는 1999년 저서(“Code is Law”)에서 알고리즘이 현실의 법처럼 기능하면서 알고리즘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우선순위 결정-분류-관련짓기-필터링 등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사 개입에 따른 오류, 편향성, 검열 등을 내포한다. 알고리즘은 이용자나 객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 조정되므로 개발자의 편견, 선입견이 반영될 수 있다. 알고리즘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인종차별, 성차별 등 역사적 편향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독과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제의 입법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빅데이터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데이터의 보호, 공개, 활용 등 여러 측면에 따른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플랫폼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적용제외를 해줄 필요도 있다. 특히 오픈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마이데이터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데이터 보호영역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관련법률로는 저작권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공개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중심 혁신’의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공개를 유도하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관련법률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및 이동성 보장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특히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반경쟁 활동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관련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

끝으로 데이터 공정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 부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 검토하고, 마이데이터(My Data)도 살펴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마이데이터는 상충되지 않는데,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는 제3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만 문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기부가 의료·금융·통신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법률로는 신용정보법이 있다.

(2) 대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제4차산업혁명 중 주로 Gig경제나 공유경제에서 간과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등장, (2) 플랫폼 협동조합의 등장, (3) 공동체 증진형 협동조합의 확산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⁷⁾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 3가지 협동조합은 가능한 모델인 것으로 평가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여 그 처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먼저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노동, 고용, 사업의 세 측면을 융합한 혁신모델이 될 수 있는데, 노동착취가 주인노동으로 대체되는 기적이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다음 플랫폼 협동조합은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몰아내고 새로운 미래기업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본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우버는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도 우버를 검토하였다가 결국 합법화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이윤추구를 제1목

7) 장종익, “제4차 산업혁명과 협동조합 4.0 시대의 도래 : 플랫폼협동조합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의 등장”, 한국협동조합연구 36권 3호, 한국협동조합학회, 2018.12, 117-134면.

표로 삼는 투자자소유기업과 비슷한 사업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크다고 본다. 반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민주주의를 융합한 모델로 협동조합 생태계와 결합할 경우 많은 순기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공동체 증진형 협동조합은 기술을 넘어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지향한다. 다만 개인 중심(me-centered) 사회에 대하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양 날개를 가진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흔히 개인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서구 시민사회의 지적 전통은 이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연에 있는 이기주의나 전체주의와는 불관용으로 배척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개인을 대척점에 두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전통적 협동조합 이론을 넘어서 새로운 협동조합이론의 개발이 절실하고, 법제도의 형성은 쉽지 않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미래는 기술혁명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 근처에는 역시 인간이라든지 사회 등을 보는 철학이 필요하며, 미래의 철학으로서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철학이 여전히 나아가 꼭 필요하다. 전통적 협동조합이론 중에서 협동조합 도그마(dogma)라고 생각하고 순수성에 집착하여 그 본래 취지를 잘못 생각하는 점을 제4차산업혁명을 통한 변화가 허물어뜨릴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점이기도 하지만, 결국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등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 차량, 3D 프린팅, 홀로그램 가상체험, 원격 의료, 힐링 팜(Healing Farm) 등이 그러하다. 법적인 관점에서 미래 이슈는 기업이나 노동자의 전통적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유전자변형 생명체나 로봇 등에 관한 제조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있다.

이 경우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탐색이 없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미래의 협동조합은 이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공유경제, 바이오기술,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부분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일부 기업에서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서 향후 기술적 발전 등 순기능은 뒷받침하는 한편,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

아래에서는 디지털 독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데이터 공유 의무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협동조합을 접목한 ‘플랫폼 협동주의’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제를 생각해본다.

(3) 디지털경제의 치유: 플랫폼 협동조합운동(platform cooperativism)

자본주의 기업이 필연적으로 독과점을 추구하여 대공황을 가져왔고, 이를 보완 또는 치유하는 효과가 협동조합 기업에 있었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고 공

정적 효과를 사람 중심으로 상승시키는 작용을 협동조합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기존의 협동조합 이론으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eratives)은 디지털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지만, 그 법적 정의나 규율이 각국마다 형성 중에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가 낳은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2015년 뉴욕 뉴스쿨의 트레버 솔츠(Trebor Scholz) 교수와 네이튼 슈나이더(Nathan Schneider) 교수에 의해 ‘플랫폼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주인이 되어 플랫폼 운영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사회운동이 제안되었다.⁸⁾ 이후 세계 곳곳에서 기술·사회변화·협동조합 부문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다.

플랫폼 협동조합의 특성으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존 플랫폼과 비슷하다. 즉 우버나 에어비엔비가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술적 핵심은 수용한다. 하지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유와 분배구조를 바꾼다(민주적 거버넌스).
- 플랫폼의 소유와 운영에 대해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최우선으로 한다.
- 소수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혁신과 효율성 개념을 재설정한다(공동설계).

이렇게 하면 디지털 독과점이나 플랫폼 주식회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V. 결론

이제까지 조합원 관점에서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미래사회, 미래금융, 미래협동조합의 모습을 각각 살펴보았다. 현재의 추세와 징조를 기반으로 하여 협동조합의 미래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로 대변되는 초연결 사회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는 조합원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또한 각 노동과 양극화는 금융소외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디지털기기를 통한 비대면거

8) Scholz, T. and N. Schneider, (eds.) Ours to Hack and to Own. The Rise of Platform Cooperativism: A New Vision for the Future of Work and a Fairer Internet, New York: OR Books, 2016.

래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될 것이다. 편리한 디지털금융 기법과 블록체인을 통한 보안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새로운 욕구(Needs)라면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열린사회가 보여주는 거버넌스, 위험사회가 경고하는 안전, 신뢰, 안심에 대한 욕구(Needs)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욕구를 가리는 심사 기회가 될 것이다. 플랫폼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더욱 더 그 장점이 잘 발휘될 것이다. 조합원이 원하는 욕구(Needs)에 맞추어 조직 구조와 사업전략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다. 협동조합법제도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따라서 조직구조에서도 협동조합은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 심지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등 협동조합 복합체가 되어야 한다. 사업전략에서도 금융을 중심으로 조합원 관련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넓혀야 한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법인으로서 장점을 되살려야 한다. 디지털 시대 협동조합이라고 하여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동일한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사회라 하여도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또는 복고적으로 더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중첩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메치니코프가 언급한 면역기억 반응에서 자기(自己)와 비자기(非自己)를 구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미래 협동조합에서도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은 “소규모, 로컬, 가치지향적”인 영역에서 강점이 있었다. 먼저 소규모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협동조합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즉 소규모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이용자소유기업(patron-owned firm)이라는 민주성과 상호성에 있는 것이고 소규모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초기단계에서는 소규모성도 들어가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민주성과 상호성이 절대적 판단기준이고 소규모성은 아닌 것이 중요하다. 즉, 대규모 협동조합 이더라도 민주성과 상호성이 담보되는 한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원을 해야 하고 이것이 선진국 협동조합 지원법제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다(예, 선키스트 남캘리포니아 오렌지협동조합이나 라보뱅크 등 대규모 금융협동조합).

다음으로 로컬 협동조합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생명이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에서도 명문화되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규모화되고 그 상품(재화와 용역)이 세계화된 시장을 겨냥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주된 목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예,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협동조합이나 데잘탱 그룹 등 사회적 경제).

끝으로 가치지향적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협동조합은 주주이익만 추구하는 영리주식회사와 달리 공동선(共同善)을 지향하여야 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빅데이터의 Value에 대하여 플랫폼독점기업과 다른 관점을 견지하여야 하고 이것이 정관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법인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회적경제나 경제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는 방식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조합원 거래의 성격과 세제 개선방향

유종오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부대표

<목차>

- I. 서론
- II. 협동조합의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성격
- III. 조합원 거래 잉여금에 대한 법인세비과세특례 제안
- IV. 협동조합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사례
- V. 다른 비영리법인과 과세 형평성
- VI. 결론

I. 서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 즉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조합원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⁹⁾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주된 거래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이뤄진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이나 그밖에 조합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¹⁰⁾ 굳이 법령에 정하지 않더라도 협동조합은 조합 잉여재고의 처분 또는 조합의 홍보나 조합원 확대 등의 필요에 의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결국 협동조합의 거래는 조합원과의 거래가 주된 거래를 이루면서도 협동조합과 비조합원간의 거래도 발생하여,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가 혼재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런데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와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겉모습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 거래의 본질은 명확히 다르다.

협동조합과 조합원 거래는 일반 영리기업의 이윤추구활동과 달리 조합원이라는 개인(또는 단체)이 생활상 또는 경제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갖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설사 잉여가 발생하더라도 그 잉여는 이윤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 필요의 충족 과정에서 효율적 관리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이다.

반면 협동조합과 비조합원간의 거래는 조합의 잉여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이 과정은 일반 영리회사의 거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회계처리(기장)를 할 때 성격이 다른 두 거래(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를 구분하여 기장함으로써, 잉여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조합원에 대한 (이용, 출자)배당

9)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10)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 제81조(사업의 이용), 제95조(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가능이익, 환급대상이익 그리고 비분배적립금 대상 이익 등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현재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조합의 잉여에 대해 예외없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협동조합의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성격

1. 협동조합 거래의 구분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해 다양한 거래를 하지만 겉모습의 유사성과 달리 영리회사와의 거래의 성격이나 주체가 크게 다르다.

회계상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한다. 손익거래는 매출이나 매입 등 손익에 영향을 미쳐 손익계산서(또는 운영성과표)에 반영되는 거래를 말하고, 자본거래란 손익거래가 아닌 거래로 자본금 납입이나 증자, 감자거래, 배당거래와 같이 손익계산서를 통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영리목적의 주식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는 자본거래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는 자본을 매개로 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설사 주주와 회사의 거래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다해도 그것은 주주로서의 거래가 아니라 주주의 다른 개별 속성(소비자 또는 거래처)으로서의 거래에 불과하다. 영리회사의 주주는 본질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

반면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는 영리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와 달리, 손익거래의 중심에 있으며, 자본거래는 그를 위한 시작이거나 보완거래에 불과하다. 영리회사는 주주의 자본금납입에서 시작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 5인 이상과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 두 소유 주체의 법인과의 관계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주주는 납입 등 자본거래 이외에 영업활동, 즉 손익거래의 주체가 아닌 반면, 조합원은 영업활동, 즉 손익거래의 중심 주체가 된다.

우리가 살펴보는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는 협동조합의 영업활동, 즉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서 그 주된 거래가 손익거래 중 매출거래일 수도 있고, 매입거래일 수도 있다. 거래의 회계적 외양만으로 보면 일반 영리회사와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협동조합 유형별로 조합원 거래의 발생원인과 양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협동조합유형별 조합원 거래의 양태

1)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하려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합원의 욕구를 모아 조합명으로 제3자에게 공동구매한 뒤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조합원들이 구입하는) 사업체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의 주된 관심사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색과 품질, 가격 면에서 얼마나 잘 매입하여 공급하느냐에 있다. 이 물품의 매입은 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선조합비를 수령하거나 조합원매출에 의한 자금의 회전에 의존한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목적은 조합 자신의 이윤창출 및 출자금에 대한 잉여의 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후생창출(결과적으로는 조합원의 삶의 질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영리회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매출거래는 영리회사와 달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마진을 높인다든지 하는 데 있지 않고, 사실상 매입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의 재고 중 잉여가 있을 경우 또는 조합홍보나 조합원 가입 유도를 위해 일부 비조합원에 대한 판매가 발생하는 데 이 거래는 영리회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text{공급총액(조합원 매출}^{11})+\text{비조합원 매출)} = (II)(\text{조합원 잉여}) + III(\text{매입액} + \text{인건비} + \text{이
자비용 등} + \text{기타 이윤}^{12}))$$

위 식에서 (I)의 조합원매출과 (II)에 해당하는 거래는 협동조합 고유의 거래이고, (I)의 비조합원 매출과 (III)에 해당하는 거래가 일반영리회사와 동일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2)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은 생산자인 조합원의 공동의 필요, 즉 조합원 생산물(재화 또는 용역)의 공동 판매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공동구매 등을 통한 조합원의 후생 증진사업체이다.

‘공동판매 생산자협동조합’을 예로 들면, 조합원과의 거래는 영업활동 중 조합의 매입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조합원이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조합이 매입할 때 매입가격은 해당 생산물의 판매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생산자 조합원의 후생(조합원의 생산활동의 안정과 지속 보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리회사처럼 매입가격을 후려치거나 출혈경쟁을 유도하여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는 행태를 보이지 않고, 조합원이 요구하는 시장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된다. 또한 판매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 출하량이 부족할 경우

11) 조합원 매출가는 매입가+조합관리비 수준에서 정해지며, 비조합원 매출가는 시장가로 정해지므로, 여기서 조합원거래 잉여와 비조합원거래 이윤이 달라진다.

12) 기타 이윤은 비조합원거래 이익과 예금 등 투자자산 관련 수익,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 사업외 수익을 말한다.

에는 비조합원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로 인한 조합원의 후생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조합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공동 판매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I)\text{공급총액(일반소비자 매출)} = (II)\text{(조합원 매입액}^{13}) + \text{조합원 잉여)} + III(\text{비조합원 매입액} + \text{인건비} + \text{이자비용} + \text{기타이윤})$$

위 식에서 (II)의 조합원매입 등의 거래가 공동판매 생산자협동조합 고유의 거래이고, (I)매출과 (III)에 해당하는 거래가 일반영리회사와 동일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3) 직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직원의 공동의 필요, 즉 조합원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통한 조합원의 후생증진을 행하는 사업체이다.

조합원과의 거래는 조합 영업활동상의 매입거래 중 조합원 인건비 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매출거래는 해당 업종의 소비자시장 등에서 발생하므로, 시장경쟁을 피할 수 없어서 영리회사와 무차별하다. 매입거래 중에서 조합원 인건비 외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매입시장에서 발생하므로 무차별하다. 오직 조합원 인건비 거래에서만큼은 다른 영리회사와 구분된다. 즉 영리회사의 인건비 정책은 회사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능하면 인건비를 억제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직원협동조합은 고용유지와 안정 등을 위한 조합원 복리후생을 위한 인건비 책정이 중요하다. 영리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둘러싼 갈등과 성격이 다르기에 조합원 인건비 정책에서는 조합의 경영상황에 따른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즉 조합원 고용안정은 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어떤 경우는 시장 인건비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자기고용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조합원들은 수용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인건비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영리회사와 직원협동조합의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적응과정이 필요하여 비조합원, 준조합원 등의 과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므로 비조합원의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text{공급총액(일반소비자 매출)} = (II)\text{(조합원 인건비}^{14}) + \text{조합원 잉여)} + III(\text{매입액} + \text{비조합원 인건비} + \text{이자비용} + \text{기타이윤})$$

13) 조합원으로부터 매입가는 조합원의 시장판매가보다 할인된 금액(조합관리비 등 명목)일 것이며, 이 부분이 조합원거래 잉여로 나타날 것이다.

14)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인건비는 조합 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의 인건비와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조합원거래 잉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위 식에서 (II)의 조합원 인건비 등의 거래가 직원협동조합 고유의 거래이고, (I) 매출과 (III)에 해당하는 거래가 일반영리회사와 동일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위의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섞여서 나타나는 협동조합이다.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원의 이해를 공통으로 반영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이상 주된 거래가 있으므로, 당 주된 거래를 중심으로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를 구분한다. 가령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된 거래는 의료서비스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유사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거래를 중심으로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매입거래를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조합원거래잉여와 비조합원거래 이윤을 구분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조합원 거래의 허용 여부와 범위

협동조합의 존재목적은 조합원 상호의 필요 충족을 통해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는데, 비조합원 거래가 필요하고, 허용해야 할까,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까?

조합원의 삶터가 지역사회인 이상 조합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수록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하다. 지역사회는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의 삶터이기도 하다.

조합의 비조합원거래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조합원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의 처리, 지역사회에서 조합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유인 거래 목적이 그것이다.

조합과 조합원 거래는 조합 거래의 중심이고, 존재목적에 부합하지만 조합과 비조합원 거래는 부차적이며, 존재목적과 무관하다. 따라서 비조합원거래는 조합 거래의 주된 대상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조합원 거래는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만한 수준(재고 또는 홍보성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 최대치는 물론 50%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조합원 거래가 조합거래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비영리적 성격을 띠는 반면 비조합원 거래는 일반영리회사의 거래와 동일한 성격의 거래이므로, 회계상의 구분과 세법상의 취급이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회계상으로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는 성격이 다르고, 그로 인한 잉여의 본질, 해당 잉여에 대한 조합내에서의 회계적 처분도 달라야 하므로 두 거래는 가능한 엄격하게 구분기

장되어야 한다. 즉, 조합원거래는 비영리거래에 속하고, 비조합원거래는 영리거래에 속하므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도 필요하다.

다만, 이상과 같은 구분기장의 필요성이나 의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규모나 기장능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정 규모 미만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결산분개할 때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간주회계처리 방식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III. 조합원 거래 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특례 제안

1.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정의와 협동조합의 세법상 특례 여부

1) 과세소득의 정의

현행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이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사업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양도소득을 말한다. 과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최순우(1983)의 논문¹⁵⁾에 따르면 세무회계에서 과세소득이란 “자본의 원입, 인출 및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두 시점(사업연도) 간에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과세소득은 응능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소득의 발생원인, 실태, 그 성격, 자금능력 등 조세지불능력을 고려하고...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귀속되므로 소득과세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납세실체의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국가의 조세는 재정조달 기능 외에도 경제성장과 안정, 완전고용, 기간산업육성 등 경제정책적 기능과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정책적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조세를 징수함으로써 소득이나 재산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 복리후생증진에 있고, 잉여의 실 귀속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므로, 조합의 잉여는 과세소득으로 보아서 안된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2) 개별법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 세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별법협동조합에 대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하여 각사업연도사업소득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는 당기순이익과세¹⁶⁾를 허용하는 등

15) 최순우,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과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1권 1호 pp.51-53, 1983

과세특례를 주고 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잉여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여 과세소득에서 조건부 배제하고 있다.

3)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잉여의 성질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협동조합의 예에서 알 수 있듯, 기본법 협동조합과 조합원 거래는 개별법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이 영리회사의 거래와 다르다.

영리회사는 영업활동이 영리회사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경영자든 직원이든 주주든)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거래처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본투자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이고, 발생한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여 더 큰 이윤활동을 추구하며, 그 일부를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주주에게 배당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이익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이익을 배당할 경우에 귀속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각각의 소득귀속자에게 과세하되 이중과세는 배제하고 있다. 영리법인은 이해관계자인 주주나 채권자의 직접적 생활상의 필요라는 후생과는 무관하며, 단지 투하된 자본의 요구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사업체다.

반면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 거래는 조합원의 생활·경제상의 필요를 결집하여 협동조합이

16) 조합법인 등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즉,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가지급금 대손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33조 및 제34조 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퇴출 등...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9.2.1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예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특수관계거래)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3.2.15, 2019.2.12.] 또한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예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10.12.30, 2013.2.15, 2019.2.12.], 즉 조합의 목적사업 거래, 즉 조합원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또는 거래처거래가 아니므로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 실행을 대리하는 것으로, 조합은 스스로 소득(이윤)추구나 유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생활상의 필요에 따른 후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는 조합원 후생의 일시적 유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합이 추구하거나 조합에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고, 조합원에게 귀속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잉여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라 할 수 없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후생을 영업활동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잠시 유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에 대한 과세도 유보하고,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잉여 또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⁷⁾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신의 소비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를 통해 양질의 물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필요를 위해 조합을 매개로 활용했을 뿐이고, 조합 또한 그 일에 복무할 뿐 독립적으로 이윤창출활동(조합의 소득창출)을 하는 조직이라 볼 수 없다. 조합의 잉여는 조합원 후생을 위한 일시적 유보이며, 이의 배당 또한 조합원의 소비절약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소비절약(또는 저축)이 과세소득이 아닌 것과 같처럼 조합이나 조합원 이 용배당은 과세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곳은 생산자 조합원 자신(또는 조합원의 사업체)이지 조합이 아니다. 조합은 생산자조합원의 판매활동을 매개할 뿐이기 때문이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들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유지를 위해 매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곳은 조합원 자신의 근로소득일 뿐이고, 조합 자신이 해당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4) 개별법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이처럼 협동조합의 잉여는 조합원의 더 큰 필요를 충족하는 후생을 위해 작은 후생의 포기에 따른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뽑아낸 이윤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해당 잉여의 실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해 소득의 성질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비조합원거래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잉여로서 과세 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배당에 대해서도 영리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한국의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으로

17) **협동조합잉여금의 성질**: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실비주의(원가주의)에 입각하여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시가주의에 의한 원가주의의 문제 및 능률적인 경영의 결과로 현실적으로는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음 두가지 성질의 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것은 이용고배당방법에 의해 조합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며, 조합원의 추가소득이 될 것이므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될지 언정 협동조합의 과세소득이 될수는 없다. 외국의 경우 영.미를 비롯한 독.프.일본.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뉴질랜드 등 11개국의 예를 보아도 이용고배당에 대하여는 모두 면세를 해주고 있다. 2)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모두 과세대상소득이 되고 있음...(최순우, 전게서 55쪽)

농협·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은 개별법협동조합과 다른 법인일까?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사이의 차이는 법률과 정관상의 일부 차이¹⁸⁾와 기본법협동조합은 금융업 등이 불가하다는 일부업종 배제 외에 차이는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성이 동일하므로,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은 당연히 비영리내국법인의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은 그 취지가 협동조합 법인에 대한 기본정의를 하는 법이기에 기본법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공통적 성격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는 관점은 협동조합의 이념에도 맞지 않고, 법인세법 규정이나 관행에도 역행하는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법인세법 제2조제2호(비영리내국법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

2. 조합원거래분 잉여금 법인세 비과세 및 이용고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허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합과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귀속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금액을 계산상 또는 관리상의 목적으로 조합에 잠시 유보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배분된 잉여가 조합원의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 거래분 잉여는 그 본질은 소비자조합원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소비절약의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사 조합원에게 해당 잉여를 이용고 배당하더라도 조합원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원의 소비절약이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이 저축될 때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뿐이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조합원거래분 잉여는 생산자인 조합원의 공동판매를 위해 할인것으로 그렇게 발생한 잉여는 추후 생산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되거나 환급되어 그의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합원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을 귀속시킬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18) **일반협동조합의 표준정관**: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지역농협정관**:제153조(청산) ①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②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조합원이 정하는 조합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귀속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④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을 인수할 조합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회에 위탁한다.

타당하고, 해당 배분 잉여금은 손금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¹⁹⁾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거래분 잉여도 근로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해당 배분 잉여금은 손금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 당기순이익과세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불필요하다. 다만 일정기간 선택적용을 할 수 있는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법인세 비과세 요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조합원 거래분 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 1)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에 대한 구분기장을 하여 각각의 잉여금 및 이익금 계산내역에 대한 근거를 갖출 것(일정규모 이하의 협동조합은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 금액으로 잉여금은 안분하여 기장하는 간편기장법 인정)
- 2) 조합원거래분 잉여금은 10%, 비조합원이익금은 100%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 3) 정관에 개별법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영리활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표시 및 청산사 잔여재산 중 비분배적립금(법정적립금)에 대한 배분금지 및 유사한 성격의 비영리법인으로 이전할 것

4. 기존 협동조합 세제특례 개선 방향

지금 협동조합 법제는 개별법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개별법 협동조합에 대한 현행 세제특례는 모든 협동조합에 대해 그 유형별 특성에 따라 앞서 설명한 조합원거래 잉여분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또는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제도화한다. 조합원거래 잉여는 주된 사업거래 잉여를 말하며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예금이자수익 등 비사업거래 이익은 과세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한다.
- 2) 비조합원거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비분할적립금으로 적

19) 일본의 경우, 사업이용고배당금:법인세법에서 잉여금의 배당을 자본거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협동조합에서 이뤄지는 이용고배당금은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수정(환불)으로 보고 잉여금처분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손금으로 취급한다.(최순우, 전거서 58쪽)

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규정을 삭제하고,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한다.

IV. 협동조합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사례²⁰⁾

1. 일본

1) 경감세율 적용: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25.5%-->19%)

2)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분량에 따라 실시하는 이용고배당은 손금에 산입함. 형식적으로는 잉여금 처분이지만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합원에 대한 일종의 할인혜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임. 부동산매각이익이나 조합원 이용과 무관 또는 조합원 거래가 아닌 잉여금은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3) 유보소득특별공제:자기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익적립금 중 출자금의 1/4까지 당해연도 유보금액의 32%~10%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음(비조합원 이용율 20% 이하인 조합만 해당)

2. 캐나다

1) 협동조합단계에서 과세하고, 배당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2단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적격한 사업소득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계산에서 이용고배당금의 손금산입 등을 통해 1단계 과세제도를 실현. 만일 협동조합법인이 단순히 회원(조합원)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대리인법상 회원(조합원)에 귀속됨.

3. 프랑스

1) 협동조합은 과세대상이나. 소비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2) 농협과 수협, 운송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되, 비조합원 거래는 매출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임. 투자조합원 지분이 50% 넘으면 법인세과세 면제가 취소됨.

3) 주택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므로 법인세 면제.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협동조합과세제도연구> 59~89에서 발췌 재인용

4. 이탈리아

- 1)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을 모든 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비과세로 하는 혜택 부여
- 2) 비분할적립금에 대해 세금면제하여 잉여금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동일한 세율로 과세
- 3) 잉여금 중 과세비율은 기본협동조합은 30%, 소비자협동조합은 55%, 농협은 20%만 과세하는 등 탄력적용
- 4) 사회적협동조합은 적립한 잉여금 전부에 대해 비과세혜택

5. 스페인

- 1) 구분경리한 조합원거래 잉여에 대해서는 20%세율, 비조합원거래 이익은 일반기업과 같이 30% 세율적용
- 2) 협동조합이 4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도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업잉여에 대해서는 20%세율 적용
- 3) 특별보호를 받는 노동자협동조합, 농협, 어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의 실질세율은 10%
- 4) 이용고배당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5) 법정적립금의 50%는 손금산입되는데, 의무적립비율은 총잉여금의 20%임

이처럼 주요 협동조합선진국의 과세제도에서는 협동조합 일반에 대한 세제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농협 등 그리고 스페인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 면제 또는 우대세율 적용 등을 행하고 있고, 이용고배당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과세소득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비과제도 많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다른 비영리법인의 과세 형평성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 거래를 비영리거래로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다른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와 비교검토해본다.

1. 일반비영리법인

일반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를 과세하되, 수익사업 잉여의 종류에 따라 50%~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일반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이후 출연금(기부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공익법인

일반비영리법인처럼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가 넓고,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를 유보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성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권장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대한 일정금액의 손금산입 허용범위가 다르고,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생활상의 필요보다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경제생활상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목적으로 영리아닌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과 다르다. 외양이 동일한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수익창출을 통한 이익증대를 통해 그 이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을 보전받으려는 것이므로, 이익증대라는 점에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하여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VI. 결론

이상 협동조합의 본질과 조합원거래 및 비조합원거래의 성격, 그로 인한 잉여금의 원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협동조합 조합원거래 잉여는 일반기업의 그것과 다르므로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의 비영리적 본질은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이 탄생한 때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에도 조합원거래 잉여를 일반기업의 이윤과 별 구분없이 취급하고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이용고배당이나 비분할적립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성장, 경제주체들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장려해야 할 사업체유형임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세제혜택, 특히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차별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보론>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방식

그렇다면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회계처리는 어떠해야 할까?

조합 유형에 따라 주된 거래 대상이 다르므로 이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1. 조합유형별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회계처리

1)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비생활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하려는 재화와 용역을 조합이 조합원의 욕구를 모아 제3자로부터 공동구매한 뒤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조합원들이 구입하는) 사업을 위해 만든 조합이므로, 공동구매, 즉 매입활동은 일반 영리법인과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회계상 다르진 않다.

따라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기장 대상이 되는 거래는 소위 매출거래(협동조합 용어로 보자면 공급거래)이다.

매입과 매출, 잉여 등에 대한 거래를 회계처리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입거래(조합원,비조합원 공통)

소비자협동조합의 매입은 원래 조합원의 소비필요에 의한 매입으로 조합원 공급과 함께 그 공급원가를 구성하지만 조합원 거래 후 남은 재고 또는 홍보나 조합원 확대목적으로 판매되는 재고는 그 성격이 조합원 공급과 달라 일반 상거래와 같이 매출과 매출원가를 구성한다. 하지만 애초에 매입할 당시에는 이를 구분할 필요도 실익도 없으므로 공통매입으로 일반상거래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차) 재고자산 000	대) 매입채무 000
부가세대급금 000	

(2) 공급거래(매출거래)

매출거래는 이익중심의 손익계산서 용어이므로, 조합원거래분에 대해서는 공급액과 공급원가로 표시하고, 비조합원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표시하여 그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원 거래분		비조합원 거래분	
차) 조합원공급채권 000	대) 조합원공급액 000	차)비조합원매출채권000대)	비조합원매출 000
	부가세예수금 000		부가세예수금000
차) 공급원가 000	대) 재고자산 000	차)매출원가 000	대) 재고자산 000

(3) 집합손익 대체

결산분개에 따른 집합손익 대체분개를 행할 때는 재고 품목 등 합리적 공급 및 공급원가 구분을 한 뒤 조합원 공급액과 비조합원 매출액에 따라 공급원가와 매출원가를 안분하고, 판매관리비 등 간접원가도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한 뒤 조합원거래에서 발생한 잉여는 조합원잉여금(또는 조합원손실금)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하고, 비조합원거래에서 발생한 잉여는 이익금(또는 손실금)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판매비도 조합원공급액과 비조합원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되,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은 조합원거래관련분과 관련된 것은 조합원 거래분 잉여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조합원거래분에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원 거래분		비조합원 거래분	
차) 조합원공급액 000	대) 공급원가(안분) 000	차)비조합원매출액 000	대) 매출원가 000
조합원손실금 000	판매비안분액 000	기타수익 000	판매비안분액 000
조합원거래기타수익0	조합원거래기타비용0	손실금 000	기타비용 000
	조합원잉여금 000		이익금 000

2)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은 생산자인 조합원의 공동의 필요, 즉 조합원 생산물(재화 또는 용역)의 공동 판매를 통한 후생 증진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과의 거래는 매입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조합원이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조합이 매입할 때 생산물의 판매시장을 고려하되, 생산자 조합원의 후생(조합원의 생산활동의 안정과 지속 보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리회사처럼 매입대상자들을 출혈경쟁을 유도하거나 쥐어짜는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기준 대상이 되는 거래는 소위 매입거래(협동조합 용어로 보자면 공급원가거래)이다.

매입과 매출, 잉여 등에 대한 거래를 회계처리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입거래

생산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재화 또는 용역)을 조합원 개개인이 판매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판매할 필요때문에 설립된 것이므로, 조합원이 바라는 방식(조합과 조건 및 금액을 협의하여)으로 매입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한다. 조합 입장에서는 판매할 재화의 구색을 위해서 조합원이 공급하지 못하는 일부 품목 또는 부족한량을 비조합원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조합원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조합원 거래	비조합원 거래
차) 조합원 재고자산 000 대) 조합원매입채무 000 부가세대급금 000	차)비조합원 재고자산00 대)비조합원매입채무 00 부가세대급금 00

(2) 공급거래(공통공급거래)

생산자협동조합의 매출거래는 생산자조합원을 대리하여 무차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생산자인 조합원은 조합에 생산물을 공급할 때 적정 이윤을 추구하지만 조합은 생산자조합원을 대리하여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분 거래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마진이 남을 여지가 거의 없고, 조합운영의 계속을 위한 수준의 잉여를 사전계획에 따라 책정하는 게 통상적일 것이다. 즉 조합원의 조합공급가는 일반 판매시장가에서 잉여를 제외한 금액인 반면, 비조합원구매가는 이윤을 고려한 매입시장경쟁가격이 될 것이다. 거래에서는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적정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매출)거래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합원 거래분	비조합원 거래분
차) 공급채권 000 대) 조합원공급액 000 부가세예수금 000	차)매출채권000 대) 비조합원매출액 000 부가세예수금000
차) 조합원공급원가00 대) 조합원재고자산 000	차)비조합원매출원가00 대) 비조합원재고자산 000

(3) 집합손익 대체

결산분개에 따른 집합손익 대체분개를 행할 때는 조합원공급액과 조합원공급원가, 비조합원매출액과 비조합원매출원가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판매관리비 등 간접비는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그리고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은 조합원거래분 관련 여부에 따라 조합원잉여금 및 비조합원이익금에 배분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조합원 거래분	비조합원 거래분
차) 조합원공급액 000 대) 조합원공급원가 000 조합원거래기타수익 000 판관비안분액 000 (조합원손실금 000) 조합원거래기타비용 000 조합원잉여금 000	차)비조합원매출액 000 대)비조합원매출원가 000 기타수익 000 판관비안분액 000 (손실금 000) 기타비용 000 이익금 000

3) 직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직원의 공동의 필요, 즉 조합원의 고용창출 및 안정을 통한 조합원의 후생증진을 행하는 조합이다.

조합원과의 거래는 매입거래 중 조합원인건비 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매출거래는 해당 업종의 소비자시장 등에서 발생하므로, 시장경쟁을 피할 수 없어서 영리

회사와 무차별하다. 매입거래 중에서 조합원인건비 거래 외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매입시장에서 발생하므로 무차별하다. 오직 조합원 인건비 거래에서만은 다른 영리회사와 구분된다.

따라서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기준 대상이 되는 거래는 소위 인건비거래이다.

매입과 매출, 인건비거래, 잉여 등에 대한 거래를 회계처리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출, 매입거래 및 인건비거래

직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창출 및 유지 등의 필요 때문에 설립된 것이므로,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제조업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조합과 직원조합원은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해당하는 잉여 중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유지를 해나갈 수준의 잉여 외에는 조합원의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약정을 맺을 것이다.

직원조합 조합원의 인건비와 영리회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영리회사는 인건비를 회사의 이익관점에서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직원들이 수용하거나 노사협의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면, 직원협동조합의 인건비는 조합원인 직원 자신이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결정의 주체가 다르고, 고려하는 상황이 다르다. 영리회사는 직원인건비는 줄여야 하는 원가 또는 비용이라면, 직원조합의 인건비는 협동조합의 고용안정과 유지를 전제로 스스로 결정하는 경영지속의 관점이라는 점이다.

매출과 매입은 이윤추구보다는 조합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상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원조합원의 자격요건 등에 의해 조합운영 과정에서 조합원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서 비조합원의 고용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조합원과 조합원은 책임과 의무, 권리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근로조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큰 범위에서는 노동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조합원인건비와 비조합원인건비 거래의 차이가 잉여금과 이익금의 구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합원 거래	비조합원 거래
차) 재고자산 000 대) 매입채무 000 부가세대급금 000 조합원인건비 000 예금등 000	차) 재고자산 000 대) 매입채무 000 부가세대급금000 비조합원인건비 000 예금등 000
차) 공급채권 000 대) 공급액 000 부가세예수금 000	차) 매출채권000 대) 매출액 000 부가세예수금000

차) 공급원가 000	대) 재고자산 000	차) 매출원가 000	대) 재고자산 000
차) 조합원공급액 000 조합원거래기타수익 000 (조합원손실금 000)	대) 조합원공급원가 000 판관비안분액 000 조합원거래기타비용 000 조합원잉여금 000	차)비조합원매출액 000 기타수익 000 (손실금 000)	대) 비조합원매출원가 000 판관비안분액 000 기타비용 000 이익금 000

공급액과 공급원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판관비 또는 제조원가, 기타수익과 기타 비용은 결산분개를 통해 조합원직원과 비조합원직원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안분하여 잉여금과 이익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위의 다양한 조합원들이 섞여 있는 거래이긴 하지만 사업을 하는 이상 주된 거래가 있을 것이다. 해당 주된 거래를 중심으로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거래를 구분하고, 앞에서 소개한 회계처리방안을 참조하여 해당 조합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 결과물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방식

조합원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의 공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의 재무제표 공시방식을 예시로 설명하겠다.

1)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에 조합과 조합원과 비조합원 거래에 따라 발생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자본항목도 조합원출자금과 법정적립금, 잉여금과 비조합원 이익금과 그 적립금 등으로 구분표시가 필요하다.

자산	조합원거래	비조합원거래	부채	조합원거래	비조합원거래
유동자산	공급채권	매출채권	유동부채	조합원매입채무	비조합원매입채무
	조합원재고자산	비조합원재고자산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	-	자본	출자금 법정적립금 조합원잉여금	--- 법정적립금 비조합원이익금

2) 운영성과표

구분	조합원거래	비조합원거래
I.사업수익	- 조합원에 대한 공급액 - 기타사업수익 - 조합비수익	- 비조합원에 대한 매출액
II. 사업원가	-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액(공급원가) 기타 사업원가	- 비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
III. 일반관리비	- 조합원인건비(임원, 직원,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퇴직연금불입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기타사업관리비(조사연구비, 회의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대사업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보험료, 수도광열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잡비 등)	- 비조합원인건비+안분된 일반관리비
VI. 사업잉여금	조합원거래 사업이익	비조합원거래분 사업이익
V. 사업외수익	- 가입수수료 수익, 조합비 수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환산차익, 가입수수료수익, 조합비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잡이익 등
VI. 사업외비용	- 이자비용, 환산차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기부금, 잡손실 등	-
VII. 세전순잉여금	조합원거래 세전잉여금	비조합원거래 세전이익금
VIII. 법인세비용	-	비조합원이익금 법인세
IX.당기순이익	조합원 거래 당기잉여금	비조합원거래당기순이익금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잉여금 총액의 10% 또는 30%를 의무적립하여야 하는데, 비조합원이익금은 100% 적립하고, 조합원 잉여금은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함.
- 배당은 조합원 잉여금에서만 이뤄지며, 비조합원 이익금은 비분할적립하여 배당을 배제할 수 있음.

구분	조합원거래	비조합원거래
I.처분전 이익잉여금	-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조합원거래분당기잉여금	- 비조합원 당기이익금
II. 임의적립금이입액	- 조합원거래분 임의적립금 이입액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법정적립금(10%, 30%) - 이용배당 - 출자배당	- 법정적립금(100%)
IV.차기이월이익잉여금	차기이월조합원거래 잉여금	-

<참고문헌>

1. 최순우(1983)협동조합의 법인세 부과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1권 1호 pp.47~61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협동조합과세제도연구」, 세법연구 13-11, pp.59~89
3.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4. 일반협동조합표준정관례

참조법령

1. 협동조합 기본법 및 동시행령
2. 법인세법 및 동시행령
3.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방안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화우

<목차>

- I. 서론
- II.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개념 및 적립의 필요성
- III.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과세특례
- IV.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조세제도
- V.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의 입법 방안
- VI. 결론

I. 서론

협동조합은 개별법과 협동조합기본법 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법인격을 부여하였는데,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개별법에 포섭되지 않는 협동조합도 동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사업체로서 다른 법인(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 등의 거래주체가 일반 대중인 것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은 거래주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일반대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 이론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한도로 가격을 설정하여 조합원과 거래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합원과의 거래가격을 협동조합이 지출하는 비용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잉여”라고 한다.

잉여(surplus)의 사전적 정의는 여분, 과잉 등으로서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거래한 가격과 관련 거래를 위해 협동조합이 지출한 비용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이익(profit)”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가격을 산정할 때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산정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산정한다. 결국 잉여와 이익의 차이는 협동조합이 이윤을 창출하는지 여부인데, 조합원과의 거래에서는 이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잉여가 창출되는 것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된다. 이러한 잉여와 이익을 모두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이라 한다.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비분할적립금이라 한다. 이러한 비분할적립금은 협동조합의 과거·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자본으로서의 역할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의 확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21) 예를 들어 학교 생활협동조합 등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있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비분할적립금은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창출된 잉여금의 일부와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분할적립금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해산·청산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협동조합을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손금산입(법인세 계산에서의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 등의 조세제도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이 잉여금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의 조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잉여금에 대한 과세로 인해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비분할적립금의 개념과 적립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또한 협동조합의 비영리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비영리법인이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를 살펴(Ⅲ) 본 후 이러한 과세특례를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Ⅳ).

Ⅱ.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개념 및 적립의 필요성

1. 비분할적립금의 개념

협동조합의 자본 중 일부는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공정한 자본을 출자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의 공동 자산은 자본에 대한 경제적 의미를 가리킨다. 협동조합의 자본 중 일부는 유보금으로 적립을 하든지 또는 조합원이 출자를 하든지 간에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으로 유보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협동조합에 유보해 놓은 자본은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또는 배당(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분할이 불가능한 자산이다.²²⁾ 결국,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으로 적립된 유보금은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데, 이를 “비분할적립금”이라 한다.

협동조합은 잉여(또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창립 시점부터 몇 해에 걸쳐 축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이다. 비분할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집합적 자산으로서 영원히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해산이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분배되지 않아야 한다.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한 후 잔여재산이 남을 수 있는데, 그 잔여재산은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분할적립금’의 정의이자 의미이다.²³⁾

22) 한국협동조합협의회, “ICA 협동조합원칙 안내서”, 2017.12, 85면.

2. 협동조합기본법상의 비분할적립금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는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에 해당하는 것은 법정적립금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를 “법정적립금”이라 한다.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립금”이라 한다.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²³⁾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 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협동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²⁵⁾

3. 비분할적립금의 적립 필요성

가. 협동조합 공동자산으로서의 자본

협동조합은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이 아닌 잉여를 창출하였다고 한다. 이익은 사업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이윤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영리법인과 같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및 상부상조를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과 같은 이익이 존재할 수가 없다. 다만, 조합원과의 거래가액이 다소 높게 책정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차액이 잉여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²⁶⁾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자본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투기나 투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여러 세대의 조합원이 필요한데, 비분할적립금은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으로서 특정 세대가 아닌 협동조합 전체를 위한 자산이다. 협동조합의 현재 조합원은 서비스 이용자이고, 생산자 또는 노동자이며 과거·현재·미래 세대를 위해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을 관리하는 현재의 협동조합 이해 관계자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합원은 미래세

23)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상계 논문, 88면.

24)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

25)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26)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상계 논문, 103면.

대의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튼튼하고 활력 넘치는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을 존속시킬 의무가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체를 유지²⁷⁾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는 비분할적립금을 가급적 많이 적립하여야 할 것이다.²⁸⁾

나. 자본 형성을 통한 협동조합의 재무구조개선

금융상품(조합원 지분을 포함)의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금융부채나 자본에 대한 분류를 결정할 때 금융상품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분류시점 현재 효력이 있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정관이 포함된다.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환이 무조건 금지되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된다.²⁹⁾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으로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운영방침에 따라 100%까지도 적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잉여금 전체에 대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이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정관에서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도 자본에 해당된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³⁰⁾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³¹⁾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분을 환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협동조합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구조에 대한 물이해와 일반적인 대출기준 및 계약 요건 미흡 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은행 등 대출기관은 부채비율 또는 총부채비율이 대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대출 조건으로 총부채비율의 제한을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협동조합 출자금의 상환 특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³²⁾ 이는 곧 대출기

27) 협동조합도 시장 환경의 변화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서비스의 유용성이 한계에 달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상계 논문, 95-98면.

29) 한국회계기준원,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2015.9, 7면.

30) 협동조합기본법 제24조.

31)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32)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인데, 부채가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높아진다. 그런데

관 대다수가 협동조합을 심사할 때 이익잉여금이나 배당 등으로 협동조합에서 인출할 수 없는 적립금만을 협동조합의 자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따라서 협동조합이 은행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분할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Ⅲ.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과세특례

1. 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영리성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³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한다.³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영리법인”이라 한다)은 상법 규정에 따라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된다.³⁶⁾ 현행의 법 제도에 따라 사단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재단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 영리법인은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상법에서 인정하는 다섯 가지 회사³⁷⁾ 중의 한 형태의 법인을 의미하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³⁸⁾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학술³⁹⁾과 판례⁴⁰⁾는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사업이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성도 없다.⁴¹⁾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1항은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목적 사업이 영리인지 또는 비영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영리법인은 상법 제169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원의 출자금은 국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됨으로서 조합원이 출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부채비율이 더욱 더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33) 사회적협동조합 iCOOP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자본 현황조사 보고서”, 필레네연구소, 2016.5. 10면.

34) 민법 제31조.

35) 민법 제32조.

36) 민법 제39조, 상법 제172조.

37)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회사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설립하는 영리법인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로 가정한다.

38)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연구”, 2017년도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7.8. 15면.

39) 비영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한우,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21면 참조.

40) 대법원 1978.3.14. 선고 77누246 판결.

41) 송호영, 상계 논문, 20면.

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리를 설립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도 민법에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영리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⁴²⁾ 이러한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영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영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 두 가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가.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

협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면 영리법인과 같이 설립등기만으로 법인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⁴³⁾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⁴⁴⁾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성립된다. 결국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데, 이는 상법과 민법에 따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의 중간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격은 상법에 따른 영리법인도 아니고, 민법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협동조합은 영리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도 아닌 영리성과 비영리성이 공존하는 “중간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론적인 측면의 검토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협동조합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여기서 구분하여야 할 개념은 “이익”과 “잉여”의 개념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로서 다른 법인(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 등의 거래주체가 일반 대중인

42)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

43)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44) 협동조합기본법 제17조.

것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은 거래주체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일반대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⁵⁾ 이론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한도로 가격을 설정하여 조합원과 거래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합원과의 거래가격을 협동조합이 지출하는 비용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잉여”라고 한다. 잉여(surplus)의 사전적 정의는 여분, 과잉 등으로서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거래한 가격과 관련 거래를 위해 협동조합이 지출한 비용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이익(profit)”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가격을 산정할 때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산정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산정한다. 결국 잉여와 이익의 차이는 협동조합이 이윤을 창출하는지 여부인데, 조합원과의 거래에서는 이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⁴⁶⁾ 잉여가 창출되는 것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된다. 이러한 잉여는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거래시점에 얻어야 할 이익을 사후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은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사후적인 가격조정⁴⁷⁾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잉여금의 분배는 가격의 할인도 아니고 배당을 한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가격과 원가와 차액을 사후에 지급한 것이다.⁴⁸⁾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⁴⁹⁾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는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은 영리법인의 이익배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거래상대방이 조합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조합원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이익배당과 같은 것

45) 예를 들어 학교 생활협동조합 등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46)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로서 조합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의 가격인 원가(이용실적배당을 통해)로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잉여를 제로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원가가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다(이한우,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2014.10, 378면).

47) 일상적으로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거래 속에서 이익이 나지 않도록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정산 없이 거래를 지속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조합원과의 거래가격이 적정하였는지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산 및 정산결과 협동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시점에 거래가격을 과도하게 측정함으로써 잉여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잉여를 돌려주는 제도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이다. 이러한 잉여의 발생은 소비자협동조합은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조합원에게 공급하였고,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노동자에게 조금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한 것이고, 생산자협동조합 중 시장 판매형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적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한 결과이다(이한우, 상계 논문, 391면).

48) 이한우, 상계 논문, 391면.

49)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이기 때문에 결국 영리법인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이익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배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이익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다. 소결론

협동조합은 상법과 민법에 따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설립의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른 영리법인으로 볼 수도 없고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협동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창출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이익배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창출한 이익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일부에 대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의 의지에 따라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정관으로 배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배당함으로써 영리법인의 성격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동시에 갖춘 중간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하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영리법인 등과 협동조합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이든 또는 비영리법인이든 지에 관계없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한다)⁵⁰⁾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⁵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50)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조업·건설업 등 사업소득,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등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정한다.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⁵²⁾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단법인인 등의 목적사업이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단법인의 이익을 출연자 등에게 분배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공익이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동창들이 각출하여 동창회에 해당하는 A사단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이러한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창들의 교류와 친목도모라고 하자. A사단법인의 동창들이 낸 회비를 통해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사업 소득을 창출하였다면 해당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목적사업인 동창들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결국 A사단법인은 이익의 50%를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이익을 반드시 공익목적에 사용할 필요성도 없다. A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동창들의 친목도모 등에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는 해당 법인에 출연한 동창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3. 영리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제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2017년 평균적인 부채비율은 204%로서 직원협동조합이 306%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 협동조합이 168%로 가장 낮았다.⁵³⁾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자본에는 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출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⁵⁴⁾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는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⁵⁵⁾ 이와 같이 조합원이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서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부채로 분류한다.⁵⁶⁾

51)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52)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5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정책보고서 2017-18, 2017.12, 127면.

54)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1항.

55)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1항.

5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조합원지분과 유사 지분)에 따르면 조합원 지분을 포함하여 많은 금융상품은 의결권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자

전 세계 300대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중 비금융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중 이익잉여금과 적립금만을 자본으로 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하면 500% 보다 약간 작고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 전체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면 300%를 약간 넘는다.⁵⁷⁾ 이를 추론하여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2017년 부채비율을 자기자본 중 이익잉여금과 적립금만을 가지고 부채비율을 계산하면 50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금융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해 과거에 영리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영리법인이 증자를⁵⁸⁾ 통해 자본을 늘리는 경우에는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과거에 재무구조개선세제로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던 증자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증자소득공제 제도 제정(1978.3.25.~1980.12.31.)⁵⁹⁾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대출금리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⁶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79년 12월 31일

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거나 제약을 조건으로 두기도 한다. 이러한 상환조건이 금융상품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지분으로 분류된다. 즉,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한 경우로써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유동성 기준에 기초하여 금지하는 등 다양한 금지조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조합이 지분의 상환요구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한다.

57) 사회협동조합 iCOOP 협동조합지원센터, 전개 논문, 10면.

58) 증자란 자본금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란 주주가 주식회사에 추가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59) 증자소득공제는 구 법인세법(제 823호, 1961.12.8.공포) 제23조에서 법인이 증자 또는 공모사채로 그 법인의 설비를 증설한 경우로서 증설로 인하여 생산능력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다. 이후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하여 증자소득 공제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1978년에 법제화되었다(한국상장회사협회, “증권시장의 성장효익 증대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 건의”, 월간 상장 2006년 7월호, 2006.7, 51면).

60)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줄일 수 없다. 이에 영리법인은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타인자본(차입금)을 선호함으로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좋게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대출금리 상당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타인자본비용(차입금)과 자기자본비용(자본금)을 균형 있게 조정해 가면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증자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다(손원익, “기업의 차입과 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12, 29면).

까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다.⁶¹⁾

$$\text{증자소득공제 금액} = \text{증가된 자본금액} \times \frac{\text{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변경 등기 후의 월수}}{12} \times \text{공제율}^{62)}$$

이후 1년 더 연장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의 증자분에 대해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⁶³⁾

나.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 확대(1981.1.1.~1981.12.31.)

기업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 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자기간을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⁶⁴⁾ 내국법인이 1981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 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한다.⁶⁵⁾

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1982.1.1.~1985.12.31.)

기존의 조세감면규제법이 198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982년 1월 1일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로 규정되어 있던 증자소득공제를 제2장 제15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은 별도의 장이나 절의 구별 없이 제1조 내지 제18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1982년 1월 1일 부터는 5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 중 제2장을 국세에 대한 조세특례로 규정하면서 조세지원의 목적 별로 18개의 절로 세분화하였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 규정은 제15절로 규정하였는데,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시점인 1982년 1월 1일에는 “증자소득공제”와 “공개법인요건등에 대한 특례” 두 개의 조세특례를 규정하였다.

증자기간을 198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이후 1984년 4월 9일의 개정을 통해

6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096호, 1978.3.15. 시행) 제4조의 2 제1항.

62) 공제율은 증자소득공제를 제정할 시점에는 16%이었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12%~24% 사이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었다.

63)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1980.1.1. 시행) 제4조의 2 제1항.

64)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2호, 1981.1.1. 시행) 제정. 개정 이유.

65)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2호, 1981.1.1. 시행) 제4조의 2 제1항.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⁶⁶⁾

라.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법인세법으로 일반화(1986.1.1. ~ 1990.12.31)

기업이 자기자본 증대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일반화하였다. 증자소득공제 제도는 조세감면규제법으로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유상증자분에 대해 1986년 12월 31일까지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한시적인 제도였다. 198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유상증자에 대해 3년 동안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으로 일반화하였다.⁶⁷⁾ 또한 기존에는 유상증자 금액에 대해서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였는데, 1986년 1월 1일 부터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주식배당)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⁶⁸⁾

마.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법인세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이관(1991.1.1.~ 1998.12.31.)

1986년 1월 1일에 법인세법으로 일반화하였던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1991년 1월 1일에 다시 조세감면규제법의 한시적인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후 기간을 연장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상증자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증자소득공제를 2년간 적용받도록 한 후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였다.⁶⁹⁾

바.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1999.1.1.~ 현재)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은 1998년 12월 31일에 폐지하고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하였다.⁷⁰⁾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재무구조 문제보다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산 매각시의 세금감면이나 합병차익에 대한 세금 특례 위주로 세제가 개편⁷¹⁾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⁷²⁾

4. 소결론

66)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1984.4.9. 시행) 제55조 제1항.

67) 구 법인세법(법률 제3794호, 1986.1.1. 시행) 제정. 개정 이유.

68) 구 법인세법(법률 제3794호, 1986.1.1. 시행) 제10조의 3 제3항.

69)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402호, 1997.8.30. 시행) 제93조.

70)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9.1.1. 시행) 제정. 개정 이유.

71) 손원익, “경제위기와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심포지엄, 1998.8.18, 69면.

72) 제2장 5절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로 기업통합, 법인전환, 자산매각, 현물출자, 주식교환, 채무면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1999년에 도입된 각종 특례제도가 변경되거나 폐지 또는 신설됨으로써 현재의 조세특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의 거래주체가 조합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같은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고, 조합원과의 거래가격에 대한 사후 정산으로 인해 잉여만을 창출할 뿐이다. 법인의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론적 논거는 이익분배인데, 협동조합의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제공한 재화 등의 원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이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잉여금을 이용실적 배당 또는 출자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창출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협동조합은 비영리(이익분배를 하지 않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현재 비영리법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의 50%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50%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②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익적인 사업⁷³⁾을 한다고도 볼 수 있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협동조합에 적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⁷⁴⁾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협동조합 잉여금의 50%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거래주체가 조합원만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을 창출함으로써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자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영리법인이 되더라도 해당 이익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면서 일부 영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일부가

73)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 활동율은 2015년에 48.7%에서 52.4%로 상승하였다. 재투자 유형은 물품기부가 22.9%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가 21.9%, 현금기부가 15.6%이었다. 지역사회 재투자 환산액은 2015년에 115.6억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234.8억원으로 119.2억원이 증가하였다. 자원봉사 등 노동력 제공이 7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기부 및 현금제공은 각각 51.9억원 및 40.1억원 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개 논문, 43-46면).

74)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에는 협동조합의 잉여금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비분할적립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에 영리법인에게 적용되었던 증자소득 공제는 기업의 차입금을 억제하여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 되었는데, 투자재원 확보 및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⁷⁵⁾ 증자소득 공제제도의 도입당 시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1985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1986년 1월 1일 부터는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증자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자본전입은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의 적립과 유사한 것으로써 해당 제도의 도입은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적립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고, 이로써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자본은 높아짐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추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늘어날수록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높아질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자본금을 축적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잉여 또는 이익을 비분할적립금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적립하여야 할 것이다.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잉여 등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증자소득공제는 70년, 80년대 우리나라의 척박한 경제 환경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영리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협동조합은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에 시행됨으로써 10년도 되지 않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영위한 단체이다. 기존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행되었던 증자소득 공제제도와 같은 조세제도를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⁷⁶⁾ 이와 같이 영리법인의 자본금과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상호간의 모순과 금융기관 등에서의 차별을 무시하고 법인(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협동조합)간의 불공평성을 운운하면서 비분할적립금 세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기존의 영리법인과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몰이해와 출자금 및 인적구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써 타당하지 않다. 영리법인과 협동조합 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인식하고 그 차이의 간

7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계 논문, 51면.

76)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서의 자금유통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 자체가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 단체로서의 출발점과 출발선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보다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격을 줄이기 위해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비분할적립금을 협동조합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등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유보소득 특별공제 등 우리나라의 비분할적립금 세제의 도입에 참고가 될 만한 일본 및 이탈리아, 스페인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조세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일본·이탈리아·스페인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조세제도⁷⁷⁾

1. 일본

일본은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한 금액의 32%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유보소득 특별공제”라고 한다. 다만, 출자금 1억엔을 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적립금을 누적인 금액(이하 “누적유보금”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공제율이 인하되는데, 공제율은 <표1>과 같다.

<표 1> 누적유보금에 따른 공제율

누적유보금	공제율
2,500만엔 이하	32%
2,5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20%
1억엔 초과 2억엔 이하	14%
2억엔 초과	10%

2. 이탈리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는 비분할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판돌피 법(Pandolfi law)이 1977년에 제정되었다. 해당 법이 제정된 후 협동조합은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잉여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은 일반 협동조합은 30%, 소비자협동조합은 55%, 농업협동조합은 20%이다.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은 최소한의 과세비율인 잉여금의 30%를 제외한 최대 70%까지 비분할적립금을 적립함으로써 잉여금 중 비분할적립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잉여금이 100유로라고 가정하자. 이 중 최소한의 과세비율인 30%에 해당하는 30유로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나머지 70%인 70유로를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77) 이하의 내용들은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11, 2013.12, 66-89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3. 스페인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2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거래주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는 20%의 세율로 과세하지만 비조합원과의 거래로 창출된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협동조합의 잉여금 중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즉, 협동조합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총 잉여금이 100유로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0유로($100\text{유로} \times 20\%$)를 적립하여야 한다. 의무적립금 20유로 중 50%인 10유로에 대해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시사점

일본·이탈리아·스페인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조세제도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일본·이탈리아·스페인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조세제도

구분	비분할적립금 세제
일본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의 32%는 소득공제 해 줌
이탈리아	잉여금 중 최소한의 과세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스페인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적립금의 50%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등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조세제도는 소득공제, 비과세, 손금산입으로 운영함으로써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만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일본 등의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제도 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진 제도이지만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 및 대규모 사업의 진출 등을 위해 잉여금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등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만 제도권으로써 운영되다가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협동조합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협동조합이 제도권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동조합은 은행 등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및 기존의 제도권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영리법인과의 경쟁력 확보,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인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및 상부상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해서는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은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비분할적립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를 국가가 거두어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협동조합이 100만원의 잉여금을 창출하였고 100만원 모두를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자 하여도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인세로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협동조합 잉여금의 일부를 국가가 거두어 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등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들의 제도를 일정부분 참고하여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V.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의 입법 방안

「Ⅲ.1. 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영리성」에서 살펴보았듯이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영리활동(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창출한 이익의 분배)을 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당 금액의 50%를 손금산입할 수 있고, 과거에 영리법인에게 적용되었던 증자소득공제도 증자 금액 및 잉여금의 자본전입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해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은 그 적립금의 50%를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업소득금액의 50%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영리법인은 과거에는 증자소득공제로 20~30%를 소득공제를 받았고 현재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세제를 통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협동조합의 본질적 특성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비영리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에게는 조세제도가 역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영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자를 하거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는 주로 70~80년대의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협동조합이 제도권으로서의 도입이 10년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협동조합이 자본을 확충하고 영리법인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분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영리법인에게

적용되었던 증자소득공제와 같은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50%를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리법인이 자신들과 협동조합이 역할별을 당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비분할적립금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에 대한 두 가지 입법방안을 <표3> 및 <표4>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용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현행	개선안
<p>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p> <p>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p>	<p>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p> <p>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u>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p>

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	--

현행	개선안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u><신설></u> ⑤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조합원에게 분배(배당) 할 수 없는 잉여금을 적립(이하 “비분할적립금”이라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 경우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잉여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2.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표 4> 조세특례제한법에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세제 도입

현행	개선안
	<u><신설></u>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2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조합원에게 분배(배당) 할 수 없는 잉여금을 적립(이하 “비분할적립금”이라한다)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의 50%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2.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VI. 결론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일부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리와 비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간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세법 규정에서는 협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없다. 비영리법인은 사업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리법인은 과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자를 하거나 또는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었다. 이러한 조세지원은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과 협동조합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잉여금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50%를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자산의 형성과 자본 확충을 위해 비분할적립금을 가급적 많이 적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거두어 가는 세금만큼 협동조합이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사회적협동조합 iCOOP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자본 현황조사 보고서”, 필레네연구소, 2016.
- 송호영,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연구”, 2017년도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7.
- 손원익, “기업의 차입과 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11, 2013.
- 이한우,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2014.
- 한국협동조합협의회, “ICA 협동조합원칙 안내서”, 2017.
- 한국회계기준원,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2호, 20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정책보고서 2017-18, 201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증권시장의 성장효익 증대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 건의”, 월간 상장 2006년 7월호, 2006.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내용과 개편

이종제

공인회계사/협동조합공작소

<목차>

- I. 서론
- II. 법인세과세대상 법인의 형태와 특징
- III. 법인형태별 법인세과세체계
- IV. 협동조합 특징에 맞는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중심으로)
- V. 결론

I. 서론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에 발효된 지 8년이 다 되어간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사회구성원의 삶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협동조합을 “민주주의 학교”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주된 사고방식은 경쟁, 지시와 복종, 이익극대화, 인간의 수단화, 승자독식 등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주류인 세상에서 자율과 민주주의, 배려, 사회적 공동체, 이웃, 신뢰와 협동 등을 배울 수 있던 조직과 공간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과 제도가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및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이 있다. 퀵기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2012년 12월 1일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일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보험이 필요하다. 만약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법인세법은 이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줄까?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들이 만든 안마사협동조합이 있다. 2013년도에 설립되었다. 이 협동조합에서 주말에 근처의 경로당에서 간식 등 선물과 안마재료 등을 준비하여 안마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간식 등 선물비용과 안마재료비 등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 설립목적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도 법인세법은 이를 순수하게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협동조합진영에서는 2013년부터 세법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세법개정 중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법인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및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법인세법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과세체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기존의 당기순

이익과세제도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과세제도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제시된 개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법인세과세대상 법인의 종류와 특징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납세의무자를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⁷⁸⁾ 내국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으로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구분된다. 영리법인은 설립목적은 영리로 하는 법인으로 ①상법상의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이하 “상법상 회사”라 함)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가능 법인 등이 있다. 여기서 이익배당가능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⁷⁹⁾

비영리내국법인은 ①「민법」 제32조⁸⁰⁾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②「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③「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⁸¹⁾

이러한 법인세법상 법인세납세의무자와 정의에 따르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크게 ①영리법인, ②비영리법인, ③조합법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논할 것이므로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을 추가할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구분은 크게 설립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립목적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조와 형태를 중심으로 납세의무자별 특징을 살펴보자

1.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협동조합 제외)

상법상 회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사업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가장 대표적

78) 법인세법제3조 제1항

79) 법인세법기본통칙 2-0

80)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81) 법인세법제2조 1호, 2호

인 조직형태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외에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으며 이는 주주 혹은 사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따라 구분되지만 설립목적은 대외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주주 혹은 사원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경영상의 특징이 있다.

- ① 대주주 혹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원에 의하여 경영된다.
- ② 사업활동(매입과 매출)이 주주등과의 거래가 아닌 대외적으로 이루어 진다.
- ③ 경영의사결정과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가 주식수 혹은 출자좌수에 비례한다.
- ④ 회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주식수 혹은 출자좌수에 비례한다.
- ⑤ 주식 등 지분증권의 가치변동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2. 비영리법인(조합법인과 협동조합 제외)

학술, 종교, 사회복지, 교육,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으로 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민법상의 법인, ② 사회복지사업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목적이 민법제32조와 유사하고, 이익배당이 불가능한 법인, ③ 법인격은 없으나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수익사업(이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자본금과 자본, 지분, 이익배당의 개념이 없다.
- ③ 주된 사업수익은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이다.
- ④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 ⑤ 해산시에도 잔여재산은 회원, 출연자등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3. 조합법인

법인세법에서 조합법인은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비영리법인으로 규정⁸²⁾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9가지 법인으로 열거하고 있다.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82) 법인세법제2조2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 ④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 ⑤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⑦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⑧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⑨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조합법인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아닌 협동조합으로서 각각 설립근거법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합법인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법 협동조합만 포함되어 있다. 조합법인들도 모두 협동조합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조합원과의 비영리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영리로 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⁸³⁾
- ② 의결권에 있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1표의 권리를 가진다.
- ③ 주된 배당의 형태는 이용고에 따른 배당이나, 제한된 비율의 범위내에서 출자배당도 가능하다.
- ④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⑤ 설립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사업행위와 비사업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 ⑥ 잉여금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⁸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⁸⁵⁾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정의를 먼저 규정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이라고 부른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정의에 따라 구

83) 농업협동조합법제5조 제3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7조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84)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1호

85)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3호

분되고 있으나, 성격상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협동조합이라 함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를 합하여 부르기로 한다.

먼저 일반협동조합의 특징은 위의 조합법인의 특징과 동일하다. 다만 특징적인 것이 출자비례배당(출자보상)이 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⁸⁶⁾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조합법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능하다.⁸⁷⁾
- ② 법정적립금의 비율이 다른 조합법인과 일반협동조합에 비하여 30%로 높다.⁸⁸⁾
- ③ 조합원이 탈퇴시에는 잉여금이 있어도 출자금만을 환급해야 한다.⁸⁹⁾
- ④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시에 출자금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상급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⁹⁰⁾

이러한 다른 조합법인과 일반협동조합과 구분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목적과 운영이 그 외의 협동조합보다 더 공익지향, 사회공동체지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Ⅲ. 법인형태별 법인세과세체계

법인형태별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차이를 비교하려면 먼저 법인형태별 과세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법인세법의 개념과 범위,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1. 중요한 법인세법의 개념과 과세제도

(1) 익금과 손금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⁹¹⁾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중요한 것은 귀속시기와 익금과 손금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귀속시기는 공통적인 것이므

86) 협동조합기본법제51조 제3항

87) 협동조합기본법제98조 제2항

88) 협동조합기본법제97조 제1항

89) 협동조합기본법제89조 제1항

90) 협동조합기본법제104조

91) 법인세법제14조 제1항

로 논외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는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순자산증가설에 따르고 있는데, 이 순자산의 증감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범위 규정이 익금과 손금이다.

1) 익금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⁹²⁾ 순자산은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익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이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처분이익, 기부금(자산수증이익) 등도 익금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2) 손금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⁹³⁾ 법인세법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⁹⁴⁾ 즉 손비는 일반적으로 ①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②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③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①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되었다는 사업관련성부분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세법상 사업은 이윤(과세소득의 원천)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회사는 매입과 매출이라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러한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는 계약자유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매입에서는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구매하려고 하며, 매출에서는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대주주(혹은 사원)의 기업 승계나 상속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기도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특수관

92)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93)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94) 법인세법제19조 제2항

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보다 매입 시에는 고가에 구매하고, 매출 시에는 저가에 매각하는 것(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을 통하여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키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게 감소시킨 금액을 과세소득에 더하도록 하고 있다.⁹⁵⁾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⁹⁶⁾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이러한 부당행위계산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며,⁹⁷⁾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를 검토받게 되어 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⁹⁸⁾ 이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절감시켜줌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규정한 제도이다.

2.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는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순자산이란 회계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으로 이 부분은 해당 영리법인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다. 특히 익금과 손금의 정의에서 보듯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총액에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총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에 순수하게 증가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다만, 익금은 원인과 대가여부를 묻지 않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것외에는 모든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나, 손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된 손비로서 일반적

95)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96)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제1항 각호

97) 법인세법제52조 제4항, 동법시행령제90조

98) 법인세법제26조 제1항

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인정한다. 예로서 비지정기부금 등 법인의 수익창출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기부금(출연재산)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법인세과세대상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세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의미한다.⁹⁹⁾ 이러한 법인세과세방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달리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정관에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인세법에서 열거되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법인세과세대상 수익사업(혹은 수입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별도의 법인처럼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¹⁰⁰⁾ 이렇게 구분경리된 회계처리 결과 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4. 조합법인

농협과 소비자생협 등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조합법인 등은 설립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설립근거법률과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적인 것도 있고 비사업적인 것도 있다. 이처럼 조합법인은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등 영리법인과 다르고, 순수하게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합법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를 합하여 체계화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 중 일정한 협동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하나로 회계단위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당기순이익과 세제도라고하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99) 법인세법제4조 제3항

100) 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5.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조합법인과 설립목적이나, 운영구조, 통제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법인세법은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과세체계가 조합법인과 다르다. 협동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 등 상법상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과세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Ⅳ. 협동조합 특징에 맞는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중심으로)

1.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법인¹⁰¹⁾(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의 조합법인과 약간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일정한 세율(영리법인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다)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일정한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협동조합법인(조합법인과 구분하여)들은 당기순이익과세제도와 일반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기순이익의 범위

협동조합법인 등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할 수도 있고,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된다.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서 당기순이익은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이다.¹⁰²⁾

101)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세무조정의 범위와 과세표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에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모든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더하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협동조합법인은 세무조정의 범위가 제한되어¹⁰³⁾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협동조합법인의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대손금손금불산입액+기부금손금불산입액+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손금불산입+대손충당금손금불산입

일반 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한 모든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협동조합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무조정만을 수행한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미적용과 특수관계자거래명세서 제출면제

협동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¹⁰⁴⁾ 따라서 법인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협동조합법인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설립목적 자체가 상법상회사와 달리 조합원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데, 이 거래는 비조합원에 비하여 우호적인 거래가 된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가 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협동조합에게도 적용하면 조합원과의 우호적인 거래 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법인에게는 특수관계자자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설립근거법률과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을 기부금과 접대비로 보지 않음

협동조합법인들이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당 당기순이익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합친 것이므로, 결산재무제표에는 설립근거법률과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지출도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출을 손비로 인정하여 세무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¹⁰⁵⁾ 일반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에서는 수익사업(이윤을 창출하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과 손실은 손비로 보지 않으나, 협동조합법인의 설

102)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72-0...1

10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9조 제1항

104)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72-0...2

1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9조 제3항

립목적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의 충족과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여러 사업중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영역에 속하는 비수익사업이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지출은 결산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이러한 비용을 부인해버리면 협동조합법인의 설립목적자체의 달성이 어렵게 되므로 이러한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면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¹⁰⁶⁾ 그러나 법인세법상 조합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¹⁰⁷⁾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과세특례를 받는 협동조합법인은 법인세법상 조합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는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조합원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조합원이 탈퇴 시 환급받아 가는 출자금(혹은 지분)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고,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협동조합의 소유구조와 자본거래 등이 주식회사 등과 다르기 때문이다.

2. 협동조합의 주요특징

조세특례제한법의 협동조합법인과 법인세법상 조합법인은 공통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서 일반적인 상법상회사와 다른 과세체계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와 다른 다양한 특징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설립근거법률만 다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칭한다)도 법인세법상 조합법인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법상회사 등 영리법인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들이다.

(1) 설립목적이 이익 창출과 조합원 지분가치 증가가 아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¹⁰⁸⁾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106) 법인세법제119조

107) 법인세법시행령제161조 제1항

108)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1호

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만든 결사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⁹⁾ 이처럼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의 충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과의 거래를 기본적인 거래로 하고 있다.

상법상회사는 이익의 달성을 통하여 소유주의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협동조합에서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지분가치 상승이 아니다.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조합원과의 적정한 거래가 목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회사는 거래상대방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주된 거래처로서 이들과의 거래에서 최소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유주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조합원과의 우호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거래는 최소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잉여(이를 “적정잉여”라 함)를 목적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최소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거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과 거래가격의 책정에서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설립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가 주된 거래의 형태이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으로 조합원과의 사업적, 비사업적거래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은 적정잉여를 마진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때로는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때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현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비조합원과의 거래시에는 현실적으로 비조합원과의 거래가격은 조합원과의 거래가격보다는 비우호적이다. 이러한 가격의 차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가 된다.¹¹⁰⁾

(4)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협동조합의 중요한 운영원칙 중에 하나가 개방성의 원칙이다. 즉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별,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차별없이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또한 탈퇴도 자유로워야 한다.¹¹¹⁾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

109)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홈페이지, Definition of a Cooperative :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110)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는 것 자체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반대로 탈퇴하는 것 또한 쉽게 처리되어야 한다.

(5)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도 의무적인 주된 사업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의 충족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협동조합의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반드시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¹¹²⁾

-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②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협동조합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비수익사업이 되며, 따라서 협동조합은 법인세과세대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둘 다가 주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은 상법상 회사와는 주되게 구분되는 사업범위의 차이이다.

3. 기존 연구자들의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비판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에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의 법인세과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졌으며,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법인세과세특례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협동조합의 특징에 맞는 과세제도의 개선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 들 중 심태섭, 김완선이 2012년 발표한 "협동조합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과 이병대, 김완선, 서희열의 2015년 발표한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소득과세를 중심으로)"를 중심으로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이를 결과로 한 협동조합의 법인세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먼저 이병대, 김완선, 서희열의 2015년 연구에서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채택취지는 크게 두가지로 본다. 첫째는 기장능력 및 세무조정능력의 부족이고, 둘째는 법인세의 우대의 필

111) ICA 홈페이지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Cooperatives are voluntary organisations, open to all persons able to use their services and willing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membership, without gender, social, racial, politic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112) 협동조합기본법제45조 제1항

요성이다. 첫 번째의 취지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협동조합법인이 이미 일정한 규모이상으로 성장했으므로 취지가 필요 없어 졌고, 두 번째 법인세의 우대 또한 다른 제도(이용고배당 손금산입이나, 저율과세등)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법인세과세표준의 일반적인 계산법리에서 벗어나는 당기순이익저율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로 인하여 일반영리법인과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의 초래와 조세중립성의 침해, 협동조합을 통한 법인세 회피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3)

심태섭, 김완선이 2012년 발표한 “협동조합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에서도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등에 있어서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의 이병대, 김완선, 서희열이 제시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제도의 도입취지의 무색화와 문제점 발생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114)

이러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있어 도입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제기된 협동조합법인의 규모의 영세성과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도입취지는 일면 맞다. 그러나 그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사업의 구조와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도입취지에 대한 설명이다. 당기순이익과세제도는 그러한 도입취지외에도 상법상회사와는 다른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세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법인세체계는 상법상회사 등 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목적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만약에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설립취지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설립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과세체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없으며, 협동조합의 특징에 맞는 과세체계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과세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의 취지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제도라 볼 수 있다.

(2)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안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를 근거 연구자들은 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법인세과세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병대, 김완선, 서희열의 2015년 연구에서는 ①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표준계산방식을 통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일반영리법인보다 저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방식의 도입, ②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지급할 수 있는

113) 이병대, 김완선, 서희열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2015년 8월,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114) 김태섭, 김완선 2012년 “협동조합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용고배당(이용고환급)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용고배당금 손금산입제도도입, ③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산출한 다음에 그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의 도입, ④협동조합의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배제제도(단,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로 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¹¹⁵⁾

김태섭, 김완선도 협동조합의 법인세과세제도에 있어 앞의 연구와 동일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제도의 개선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제도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법인세저울과세제도의 도입
- ② 이용고배당(이용고환원)의 손금산입허용
-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배제

그런데 위의 ①, ③은 기존의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기존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과세형평의 문제점 발생, 법인세 회피목적으로 협동조합설립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것은 9% 저울과세제도로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협동조합과세제도 개선안으로서 저울과세도입을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에게 저울과세를 도입해야 하는 논리적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선안은 필요한 것으로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용고배당(이용고환원)의 손금산입제도는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 볼 수 있다.

4. 협동조합특징에 맞는 법인세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안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운영구조, 통제구조, 자본의 특성 등은 농협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개별법협동조합은 상법상회사와 구별되는 당기순이익과세라는 독특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기장능력과 세무조정능력의 부족과 법인세우대의 필요성만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당기순이익과세제도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던 협동조합의 주된 특징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주된 사업의 범위이다. 법인세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발전하여 왔다. 이 둘은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

115) 이병대, 김완선, 서희열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2015년 8월,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로 영리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비영리법인은 주된 사업자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법인세과세대상 수익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둘은 주된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모두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뚜렷하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비수익사업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지출 혹은 비용만 발생하여 구분경리의 대상자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법인은 하나의 회계단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경리하여 손익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세법에서도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모든 주된 사업에 대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법상회사는 최소의 가격으로 구매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익극대화 전략으로 사업한다. 법인세법은 이러한 영리법인의 사업구조에 맞게 체계화되어 왔다.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 영리법인의 원칙을 위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이 원칙을 과하게 위반하면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방식과 반대의 방식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거래를 주된 거래방식으로 하는 협동조합에는 기존의 영리법인 법인세과세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이윤의 창출과 이를 통한 조합원의 지분가치상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거래를 수단으로 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강제된 협동조합의 의무이다. 이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지출 혹은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설립근거 법률과 정관에서 강제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출과 비용을 세법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을 설립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발전해 온 법인세과세체계를 협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네 번째는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조합원이 스스로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집단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조금 더 비싸게 사간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말이다.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회계상 잉여가 발생한다. 이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서는 안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구매를 통하여 입주민들이 시가보다 싸게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이득이 발생했다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까? 공동구매형 협동조합에서의 잉여의 발생원천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저율과세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지역을 위한 사업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잉여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해

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와 다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지역공동체가 살아난다. 이러한 이유로 협동조합에 대한 저율과세가 필요하다. 당기순이익저율과세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징으로 인해 협동조합에 맞는 가장 적절한 과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 법제72조의 당기순이익과세제도가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협동조합과세제도 중에서 저율과세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배제는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있던 것으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 없다. 다만, 현행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필요한 제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포함하면 될 것이고, 커다란 범위에서의 과세제도의 변동이 없어도 될 것이다.

(1) 이용고배당(이용고환원)의 손금산입

이용고배당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이용배당을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용고배당은 주식회사등에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경영성과를 보상받은 배당과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다. 이용고배당의 본질은 가격의 사후조정으로 원직상 협동조합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 세계적인 추세와 이용고배당의 본질에 고려하여 이용고배당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공익목적 실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사업의 우선성을 두는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조합원의 귀속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잉여금은 모두 다른 지역사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잉여금전체가 불분할적립금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 중 30%이상을 의무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의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잉여금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정적립금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고려사항이 있어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취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은 결국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그리고 해산시에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매년 법정적립금 적립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또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포함하면 된다.

현행 당기순이익과세제도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잘 반영한 법인세과세체계이며,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이용고손금산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불분할적립금 손금산입을 당기순이익과 세제도에 포함시킨다면 더 완벽한 협동조합과세체계가 될 것이다.

V. 결론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경제적 거래를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협동조합이 사업활동으로 매입과 매출활동을 하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가 아니라 조합원이 스스로 필요충족을 위한 행위로 그 원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와 다르다. 법인세법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통하여 획득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행위를 대상으로 과세체계가 발전해온 법인세법을 그대로 협동조합에 적용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전하였으며, 그 핵심은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와 목적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인정하여 자율적 경영을 보장할려다 보니, 영리법인과세중심으로 법인세법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체계를 만들어 온 것이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이다.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는 협동조합의 본질과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의 당기순이익과세제도에 ① 이용고배당(이용고환원) 손금산입제도와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손금산입제도를 추가하게 되면 더 협동조합에 적절한 과세제도로 될 것이다. 협동조합은 상법상회사와 설립 목적과 운영구조와 통제구조가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해하고 만들어 진 것이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이므로 이의 범위내에서 협동조합과세체계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이를 통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쳐야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이다. 법과 제도가 이러한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은 강화되고, 누구나가 일정한 일자리와 소득을 가지며,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행복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을 그려보며 당기순이익과세제도가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주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협동조합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¹¹⁶⁾

정상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지원팀 차장

1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I. 서론
- II. 국내 협동조합 정책 방향
- III. 협동조합 제도개선 성과와 한계
- IV. 향후 제도개선 방향
- V. 결론

I. 서론

2009년 12월 UN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UN은 물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2000년대 들어서 각국의 협동조합 법제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¹¹⁷⁾ 국내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법인격 부여와 협동조합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담는 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9일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우리사회에 협동조합 제도화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18,94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인가)되어 짧은 기간에 급격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협동조합은 소유구조 측면에서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이익보다는 장기이익을 추구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운영을 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자본보다도 조합원의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도 기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자본 중심의 주식회사와는 차별화된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모델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협동조합이 경제사회의 활동 주체로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다¹¹⁸⁾. 따라서 법 시행 이후 법제에 대한 후속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겨 졌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과 관련한 법제가 주식회사, 즉 투자자 소유기업 중심으

117) 한국협동조합협의회,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2017), 120. 200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 결의안 56-114'는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활동을 규정하는 적절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118) 김강현,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연구”,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2020) 108. 2011년 10월 12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하고 78일만에 의사결정과 의견수렴, 입법과정을 거쳐 전격적으로 제정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통상적으로 수개월~수년이 소요되는 상임위원회 의결부터 법사위 및 국회본회의 통과에 이르는 전과정을 불과 이틀 만에 이루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의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다. 정리하면 새로운 법인격 신설에 따라 후속하여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들이 진행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도보다는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하나의 정책대상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협동조합 정책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직제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⁹⁾. 협동조합 제도의 독특성이 우리 법제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 정책 방향이 ‘제도’에서 ‘경제정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협동조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되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제도개선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협동조합 법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에서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개정 내용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방향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 협동조합 정책 방향

1. 협동조합 정책 분류기준

협동조합 정책은 각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수준과 협동조합 운동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협동조합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전통이나 그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달해왔다. 강희원(2013)은 협동조합 정책을 협동조합과 국가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방임주의 정책형, 산업자본주의 진입정책형, 후기자본주의 보완정책형으로 분류한다. 유형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주의 정책형’은 영국, 미국 등이 해당하며, 국가는 협동조합에 적극 개입보다는 그 존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진작 정책이나 탄압정책도 취하지 않는 유형이다. 둘째, ‘산업자본주의 진입정책형’은 독일, 일본 등이 해당하며, 국가주도하에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산업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경제·사회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셋째, ‘후기자본주의 보완정책형’은 프랑스, 이탈리아

119)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 직제개편을 통해 협동조합정책과와 협동조합운영과를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로 개편하였다. 즉, 협동조합 관련 직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리아 등이 해당하며, 1970년 석유파동과 1980년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위기에 따라 경기침체, 대량실업, 사회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인 정책수단으로 협동조합을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그러면 한국의 협동조합 정책은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하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목적과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협동조합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협동조합 정책 방향 진단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목적

2011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양극화 문제 완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 유형을 판단해보면 ‘후기자본주의 보완정책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 그리고 경쟁과 효율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협동조합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 국회입법과정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안이유

의안	제안이유
손학규 의원 등 74인 (의안번호 1813419)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 하였기 때문임
김성식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813725)	세계적인 글로벌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략)… 경제·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요인은 점차 증폭되고 있음 …(중략)… 협동조합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양극화 문제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후략)
기획재정위원장 (의안번호 1814332)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김강현(2020) 재인용

나.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체계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¹²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추진체계를 통해 국내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1)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년~2016년)

2013년 발표된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설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을 구체적인 성과목표도 제시하였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이라는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한다고 정책 추진방안도 명시하였다.

2)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년~2019년)

2017년 발표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과 같은 비전 아래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자생력 제고,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이라는 4대 핵심전략을 설정하였다. 정책과제의 실행을 위한 추진 기제는 지역밀착 및 규모화된 유형별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정책사업·환경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을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

3)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년~2022년)

2020년 발표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자유로운 설립지원으로 양적 확대를 이룬 성과를 coop 1.0으로 규정하고, coop 2.0시대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다.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라는 새로운 비전하에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평균출자금 8,000만원, 평균 매출액 6.0억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45%, 연합회/협의회 가입률 60%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지역사회 중심 운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내실화라는 5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120)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표 2>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체계 비교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Coop 2.0 시대로 도약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전략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	자생력 제고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지역사회 중심 운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내실화
추진기제	민간이 자주·자립·자치의 원칙하에 주도적 역할 정부는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지역밀착 및 규모화된 유형별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 정부는 정책사업·환경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 국내 협동조합 정책 진단

국내 협동조합 정책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본주의 정책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후기자본주의 보완정책형'과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 추진 방식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교육·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 중심으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제1차 및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추진 기제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방식 측면에서는 '방임주의 정책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임주의 정책방식이 채택된 이유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취득했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 시민운동 진영에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부 지원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¹²¹⁾

방임주의 정책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 환경조성이 다.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부터 제3차 기본계획까지 일관되게 협동조합 제도개선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이유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21) 최유성,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10.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지원 필요 없다. 간섭하지 말고 법인격만 부여해 주면 된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면 농협과 같은 관제협동조합을 양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Ⅲ. 협동조합 제도개선 성과와 한계

1. 제도개선 방향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새로운 협동조합 법인이 기존의 다른 법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조성이다. 타 법인과의 차별 시정과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법인 등 타 법인과 “법인”이라는 법인격 측면에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존의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특성 측면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리법인으로서 일반협동조합¹²²⁾과 주식회사 사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단법인 사이에 법령에서 사업 활동 분야를 달리 규정하고 있거나 차별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농협·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간에 활동이나 지원에서 차별이 있으면 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제도개선의 주요한 과제이다.

2.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

1) 협동조합 설립 가능 분야 확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보험이나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사업 활동이 가능¹²³⁾하게 되었지만, 사업 활동의 인·허가 등을 규율하는 개별법령에 협동조합 법인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해당 법령과 관련된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주어야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법인과 차별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시행된 법령과 이후에 시행된 법령에 협동조합 법인격 반영이 필요하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현장의 요구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 10월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122) 일반협동조합의 영리법인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연구(심인숙, 2014; 류창호, 2015; 정순문, 2019 재인용)도 있고, 영리와 비영리가 혼재되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연구(정순문, 2019; 김용진 등, 2020)도 있다.

123)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사업)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는 등 총 26개 관련 법령에 협동조합 법인격이 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되었다. 내용상으로 주로 농·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분야나 정부위탁사업자 범위에 협동조합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법령상으로 15개 법률, 8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다만, 여전히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법에 협동조합 법인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사업영역에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례가 없어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가 아직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¹²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도입되어 관련 법령에 대한 법인격 반영하는 후속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 설립 가능 분야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해당 분야에서 현장의 요구가 존재하여야 개선이 가능한 분야이다.

<표 3> 협동조합 법인격이 추가된 관련 법령 현황

연번	관련 법령	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협동조합 및 연합회 추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축분뇨 이용 관련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4	낙농진흥법 제2조	집유조합 지정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	광역지역자활센터 지정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업(조합형태인사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상 기업 범위에 협동조합 포함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	자동차손배법상 재활시설 운영자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9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업 생산자단체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10	공인중개사업 시행령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법인에 일반협동조합 추가
1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종류에 협동어린이집 추가
1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일반협동조합 추가

124)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률 제17158호, 2020.3.31. 일부개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이 신설되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1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동산림산업 주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¹²⁵⁾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중소기업상당회사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1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자에 협동조합 포함
1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자격에 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자에 협동조합 포함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협동조합 포함
22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	어촌어항재생사업자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에 협동조합 추가
2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에 협동조합 및 연합회 추가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민간임대주택 공급 법인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에 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타법상 제도적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주체의 하나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정

125)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98호, 2020.2.11. 제정)에 통합되고 삭제됨

부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에 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우선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지원사업에 협동조합이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타법상 제도적 지원대상에 협동조합이 포함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2020년 10월 현재까지 8개 법률, 11개 시행령, 2개 시행규칙, 5개 지침 등 총 26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55조와 같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함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개정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표 4> 타 법상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현황

연번	관련 법령	내용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3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등 사업 우선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4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추가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6	협동조합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	지역신보신용보증기금의 협동조합에 대한 한시적특례보증을 상시적특례보증으로 변경
7	미소금융재단 정관 개정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8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간소화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일반협동조합 조직 전환시 청산배당소득 면제
10	협동조합 희망보증 업무처리방법, 협동조합 특례보증 업무지침	협동조합 희망보증 보증대상 확대, 특례보증 보증요율 인하, 보증한도 확대, 희망특례보증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사업에 협동조합 설립 포함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여성기업 지정요건에 일반협동조합 추가
13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기업 지정요건에 일반협동조합 추가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율 할인대상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국유재산 매입할 경우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 연장 가능 대상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	교육 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1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수익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대상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필요)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익계약 가능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필요)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수익계약 가능법인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필요)
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4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시설 사용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23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2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공예 관련 공공구매, 공동판매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25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 지침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용자 가능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자료

3. 제도개선 성과의 한계

현재까지 추진된 제도개선은 타 법인과 활동상의 차별 해소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재생, 물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협동조합이 명시되었고,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중소기업 정책사업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등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협동조합 현장에서 제기해왔던 세제 관련 사항과 협동조합의 독특한 조직운영원리를 법체계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1) 세제 분야 제도개선 미흡

2020년 10월 현재까지 협동조합 세제와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일반협동조합의 조직 전환 시 청산배당소득 면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가지가 전부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이내에 50% 감면조항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목적 측면에서 동일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이 유사함¹²⁶⁾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농협, 수협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특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단일세율(9%)이 적용되고 당기순이익 기준의 과세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개별법 협동조합과 조직의 목적, 운영원리가 같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즉,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은 같은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적용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달리 취급받고 있다.

세제 분야 제도개선에 대해 개별법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 규정이 있는 특례조항이고, 설립하기가 쉬운 기본법 협동조합까지 특례를 허용할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현재 기본법 협동조합의 매출 수준이 높지 않아 현실적으로 세제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하

126)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가지(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의 실현,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 수입, ⑥정관의 필수사항,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은 3가지(④, ⑥, ⑦)는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지만, 개별법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는 「상법」상 회사 중심의 우리의 과세체계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거래의 구분, 원가경영 등 협동조합의 거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이므로 세제 감면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2) 협동조합 운영 관련 제도개선 미흡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전에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8개의 개별법 협동조합 법률이 먼저 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항¹²⁷⁾에서는 명시적으로 개별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은 8개의 개별적인 특별법의 영역 외의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2항¹²⁸⁾에서는 개별 협동조합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법과 개별법 관계가 법 제정 당시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법 규정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후에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설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와 시도는 거의 없었다.

협동조합은 구조적 이중성을 가진 독특한 조직형태이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자이면서 이용자이며, 조직은 인적 연합(human association)의 결합체와 물적 결합(capital combination)인 사업체로서 이중성을 가진다. 자본 구성은 출자금과 적립금으로 구분되며, 출자금 및 적립금 중 개인 지분 부분은 “개인소유”이고, 적립금 중 비분할적립금은 “공동소유”라는 측면에서 이중적이다.¹²⁹⁾ 이러한 구조적 이중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 도입, 협동조합 회계 기준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IV. 향후 제도개선 방향

건전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권장하고 협동조합의 사회 불평등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정책대상으로서 협동조합과 법인격 제도로서 협동조합을 분리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으로 부실한 협동조합이 난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 설립만 되면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향후 정부 재정 부담과 함께

127)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8)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29) 강희원,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 736-742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개선의 중심이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에서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맞는 제도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 발현 지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¹³⁰⁾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조직형태로 거론되고 있다.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 정책대상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협동조합이라는 독특성을 반영하는 노력은 미약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은 정책대상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과 다른 독자적인 법인격이다. 즉 정책대상이면서 법인 제도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진 모든 조직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상 회사라는 이유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이유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법상 회사와 차별이 된다. 물론 협동조합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국내 협동조합도 최근 3차례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보면 협동조합의 고용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협동조합의 고용친화적 성격이 증명되고 있다.

1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3712,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2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표 5> 협동조합 실태조사 비교표

구분		2차 조사(14년말)	3차 조사(16년말)	4차 조사(18년말)
운영 조합수		2,957개	5,100개	7,050개
고용	피고용자	2.7명 (총 7,967명)	4.0명 (총 20,409명)	4.4명 (총 31,335명)
	임금근로자	2.2명 (총 6,484명)	3.5명 (총 17,707명)	3.8명 (총 26,579명)
	월평균임금	130.4만원	131.3만원	158.2만원
	주당 근로시간	36.1시간	34.4시간	31.4시간
	취약계층 비율	26.8%	43.3%	42.3%

출처: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김지원·이제복(2018)은 장애인 협동조합 사례연구를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 효과를 지니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따른 근무 환경을 구축해 나감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가치 증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는 모든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협동조합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 이행, 사회적경제 평가 등급 우수, 조합원 교육시간 수 등 요건을 충족한 협동조합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상법」상 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 변경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이다.¹³¹⁾

2. 통합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제도개선 접근

1)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재정립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민법 및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의 모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개별법은 조합원 유형이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체계로 개선하는 것을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즉,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131)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라 상법상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는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847, 2016.7.14.)을 통해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기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하고 있다.

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제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나씩 추진해야 한다.

세제 분야 제도개선 과제도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은 세제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과 운영원리가 다른 부분을 고려해 그 독특성을 고려한 세법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기본계획은 개별법을 포함한 우리나라 협동조합 전체의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실태조사는 농·수협 등 개별법을 포함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농협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이사이며, 세계협동조합의 대표조직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벨기에와 달리 협동조합을 법인격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조사대상이 명확하며, 객관적 통계관리도 가능하다.

2) 협동조합 이중적 특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협동조합은 조직구조에서 이중적이다.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기본적으로 물적 결합보다는 인적 연합이 중심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에서 인적회사의 특징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이용자이면서 소유자이다. 따라서 임원, 이사회보다는 조합원 총회나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¹³²⁾. 협동조합의 총회는 대화와 토론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가깝다. 협동조합의 운영은 투명하게 조합원에게 공개되고, 조합원 대상 교육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자본 및 소유의 이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은 더욱 중요하다. 자본의 이중성이란 출자금과 적립금으로 자본이 구성되는 이중성을 말하며, 소유의 이중성은 개인소유와 공동소유의 이중성을 말한다.¹³³⁾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출자금은 부채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에서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대비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출자금 외 적립금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법제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¹³⁴⁾되고,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비조

132) 김용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20) 317-345. 협동조합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소수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 임원과 협동조합 간 이해충돌 방지, 조합원의 대표소송 제도,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되기도 한다.

133) 강희원,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2013), 741

134)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

합원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다.¹³⁵⁾ 출자배당과 이용배당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¹³⁶⁾ 이로 인해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협동조합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사실상 이사장 1인 조합, 가족회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도 있다.

따라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거래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비조합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¹³⁷⁾. 소유 측면에서 개인에게 배당할 수 있는 지분은 조합원 이용과 출자에 따른 부분이고, 비조합원 이용에 따른 잉여는 배당이 불가능한 비분할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재산 배분시에도 청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내용이 정관에 반영된 협동조합의 경우에 세제 지원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인 경제주체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자치관리라는 제3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오스트롬 교수는 협동조합이야말로 경제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하였다.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 현재 20,000개 가까운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인가)되어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타 법인과의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며,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활동 분야와 지원제도에 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법제가 개선되는 제도개선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세제 분야와 협동조합의 독특성을 우리 법제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협동조합의 독특성을 우리 법제에 반영되려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이 지원 중심으로 변경되고,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일부로 취급되면서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 자체가 사회적목적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협동조합 세제 지원은 협동조합이 우리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협동조합 세제에 대한 담론은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협동조합 조직운영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위한 인

135)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136)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137)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s, PECOL)에서도 비조합원 거래로 인한 이익은 비분할 적립금에 들어간다고 명시하고 있다.((재)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 리뷰 보고서, p23)

센티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법과 개별법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앞으로 협동조합 제도개선의 방향은 타 법인과의 차별시정에서 협동조합 운영원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화 시기의 경제적 가치, 민주화 시기의 정치적 가치를 최우선의 시대정신으로 삼았지만, 공유하는 가치가 사라진 지금 갈등하고 충돌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 해법을 사회적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¹³⁸⁾ 협동조합은 그 운영원리에 따라 운영이 될 때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이용자 중심의 조직, 민주적 의사결정 등 협동조합의 조직운영형태의 특징이 발현될 때 고용의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효과가 나타난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협동조합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내부운영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은 중요하고 핵심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할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최유성(2012),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생협평론」, 12, pp. 8-21.
2. 강희원, 이광택, 장홍근, 고형면, 정태길, 변철환, 김용진, 이상용, 선미란(2013), 「협동조합을 활용한 일자리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함께일하는재단.
3. 강희원(2013),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경희법학」, 48(4), pp. 701-750.

138) 이재열,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한국행정연구 제28권 제3호(2019), 2

4. 강희원(2014), “협동조합 정책과 법제의 개선”, 「경희법학」 49(2), pp. 3-44.
5. 소재선, 이창규(2015),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에 관한 고찰”, 「법제연구」, 48, pp. 235-267.
6. 한국협동조합협의회(2017),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7. 송재일, 김용진, 김형미, 문선훈, 이세현, 정순문(2017),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 리뷰 보고서」, 기획재정부·(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8. 김지원, 이제복(2018),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애인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2), pp. 25-62.
9. 정순문(2019),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공익과 인권」 19, pp. 233-288.
10. 이재열(2019),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한국행정연구」, 28(3), pp. 1-33.
11. 김용진, 김형미, 최은주, 신창섭, 이태영, 김재원(2019),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2. 김강현(2020), “킹덤(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연구”, 「입법과 정책」, 12(1), pp. 87-115.
13.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보도자료 및 기사 등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협동조합정책과(2013.11.15.)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정책과(2013.12.30.)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정책과 (2015.12.3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협동조합정책과 (2017.1.1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경제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재부 내부 조직개편 추진”, 인사과(2017.8.17.)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협동조합과 (2018. 2. 13)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협동조합과 (2020.3.31.)

주요국의 협동조합 조세 제도

신창섭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목차>

- I. 들어가며
- II. 주요국의 협동조합 조세 제도
- III. 나오며

I. 들어가며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모든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한국협동조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협동조합연구」를 놓고보자면 2012년 이전에는 최순우(1983)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협동조합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해방 이후부터 1981년까지 국내 협동조합들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의 일환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1982년부터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지만 비영리법인 의제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등 일정하게 세제 혜택이 유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에서야 김완석·심태섭(2012), 손원익 외(2013), 이한우(2014), 김수란(2015), 김예은(2016) 등 점차 협동조합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협동조합은 이용자적 결합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투자자 소유 회사와 목적과 구성원리가 다르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최순우(1983:55-57)는 협동조합 사업의 본질적 속성으로 ‘실비주의(operation at cost)’와 출자배당의 제한을 제시하고, 협동조합 법인과세는 조합원과의 거래와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구분하여 조합원과의 거래는 실비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이 아님을 설명하고,¹³⁹⁾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은 해산시에도 분배할 수 없으므로 역시 협동조합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¹⁴⁰⁾

이한우(2014:391)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현행 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협동조합의 원가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이용실적환급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 역시 원가경영을 통해 조합원 편익 추구라는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9) 협동조합의 이용실적환급에 대한 비과세는 세금 면제(exemp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잉여금은 조합원이 지불해야 할 가격 추정의 오류로 발생했고, 조합원에게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세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세금 면제가 아니다. Aguiar, Nina, *Taxation of Cooperatives: General Guidelines and Problems* (2018), 번역협동조합 옮김, 「협동조합 과세-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9), p. 4.

140) 최순우(1983), 협동조합의 법인세부과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1(1). Aguiar(2018) 역시 조합원들이 이용실적환급을 받지 않고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을 협동조합 고유의 자본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Aguiar, 위의 자료, p. 6.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자이면서 이용자라는 이중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조합원과 협동조합 간 거래에 대해 아무 근거없이 세제 감면이라는 혜택을 주게 되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출자자의 지위에서 행동을 하고 배당을 받을 때는 현행 세제의 적용을 받으면 되고 세제 혜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의 지위에서 공동행동과 원가경영을 통해 이용자로서의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성격을 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사업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세법으로 인해 이용자적 결합이 아닌 출자자로서의 결합만이 강화되는 결과를 낼수도 있기 때문이다.

Packel(1941:138)은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과 협동조합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구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구별없이 감면 조항만 있을때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협동조합은 대상이 되고,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은 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렇다고 본다. 비영리법인 의제와 당기순이익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협동조합과 그렇지 못한 협동조합만 있고,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순우(1983)를 비롯한 선행 연구들과 이 자료집 앞의 글들이 설명한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원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주요국의 협동조합 조세 제도

1. 미국

미국 농무부(USDA)의 협동조합 정의는 ICA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발표하기 이전 1987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등장한다.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기업이다.’ 임영선(2014)은 이 정의가 이용자가 협동조합을 소유한다는 소유의 측면, 이용자가 통제한다는 이용의 측면,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분배의 측면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⁴¹⁾

Packel(1941:139-151)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제도는 많은 논쟁을 통해 자리잡았다. 협동조합의 조세 감면에 반대하는 자들은 협동조합의 잉여금(surplus)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profit)과 다르지 않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을 지속할 경우 협동조합만 번성하게 되고 세금을 낼 회사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협동조합 진영은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실적한

141) 임영선(2014),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p. 67.

급은 과잉징수된 잉여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법원의 소송에서도 계속되었고 1930년대 일련의 판례를 통해 이용실적환급은 고객에 대한 할인이나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과세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받았다.¹⁴²⁾

Fedrick(2013)에 따르면 미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 원칙은 single tax principle로서 법인 혹은 조합원 중 1회만 과세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는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의 Section 521과 Subchapter T ‘협동조합과 그 이용자들(patrons)’에서 주로 규정한다. Subchapter T에서는 이용실적환급과 적립금에 대한 감면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Section 521에서는 감면을 받는 협동조합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521 조문의 서술은 주로 ‘농업협동조합 등’이라고 서술되는데,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Subchapter T는 모든 농업협동조합과 Section 521에서 정한 협동조합들에게 적용된다. Section 521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¹⁴³⁾

<Section 521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

- 자신의 이용자들에게 잉여금(margins)을 돌려줄 목적으로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경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원부재료나 장비를 구매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 자본금을 가질수 있되 대부분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있어야 하고, 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한됨
- 특정한 적립금(reserves)을 가질 수 있음
- 조합원과의 거래가 다수여야 하며 조합원이 아니거나 생산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15% 이하여야 함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이용실적환급을 손금산입하는 것과 조합원의 이용 물량에 비례하여 단위당 자본적립금으로 유보된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제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¹⁴⁴⁾

<이용실적환급의 과세소득 공제 조건>

- 조합원이 이용한 양이나 가치에 비례하여야 함
-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분배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142) Packel, Israel(1941), Cooperatives and the Income Tax,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p. 139-151.

143) Fredrick, Donald A.(2013), *Income Tax Treatment of Cooperatives - Background (2013 Edition)*, USDA, Cooperative Information Report 44, part 1. p. 10.

144) 김완석·심태섭(2012),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12(2). p. 21.

· 협동조합의 사업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의하여 분배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조합원에게 분배된 이용실적환급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과세소득이 된다. 단위당 자본적립금으로 유보하는 것이 역시 조합원의 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 실제 현금흐름은 없지만 개념적으로 이용실적환급 이후 조합원들이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용실적환급은 모두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¹⁴⁵⁾

2.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은 「민법」 제5권 ‘노동’ 중 제6편 ‘협동조합과 상호보험조합’에서 규율하고 있다.¹⁴⁶⁾ 이탈리아에서는 협동조합을 ‘상호적 목적(scopo mutualistico)을 지닌 가변자본¹⁴⁷⁾을 갖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2511조).¹⁴⁸⁾ 이탈리아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로 상호적인 협동조합(cooperative a mutualità prevalente, 이하 PMC)’과 ‘상호적이지 않은 협동조합(이하 non-PMC)’을 구별한다는 점이다. PMC란 ‘조합원 이용이 50% 이상인 협동조합’을 말한다(동법 제2512조). PMC와 non-PMC는登記부에서도 서로 구별되어登記되고, PMC는 협동조합 과세를 적용받지만, non-PMC는 협동조합 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PMC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주로 상호적인 협동조합(PMC)의 조건>

-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매출액,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노동 경비,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양 또는 매출액이 50% 이상
-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협동조합의 경우 유형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 사용

145) Mayer, Bruce · Peg Nolan · Steve Wolfe, *Accounting Best Practice for Food Coops*, National Cooperative Grocers Association. <https://uwcc.wisc.edu/resources/grocery/> (최종검색일 2020.11.2.)

146)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참조
<http://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regio.decreto:1942-03-16:262> (최종검색일 2020.10.29.)

147) 자본의 가변성은 협동조합에 고유한 속성으로서 이탈리아 「민법」 제2524조는 정관이나登記의 변경없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라 자본이 변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48) 박광동 · 김형미 · 히로타 야스유키 · 신창섭 · 홍고우니(2019),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134.

또한 PMC는 「Basevi법」 제26조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요건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상호부조 요건은 아래와 같다.

<「Basevi법」 제26조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요건>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우편채권 수익률의 2%를 상회하면 안됨
- 배당과 환급이 잉여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안됨(협동조합 은행은 30%)
- 조합 존속 기간 중 적립금의 조합원 분배 금지
- 청산시 불입 출자금과 그해 배당을 공제한 후 잔여재산은 상호부조의 정신과 합치하는 공공 목적에 양도해야 함¹⁴⁹⁾

이탈리아의 법인세(IRES)율은 24%이며 여기에 기업소득지방세(IRAP, 일반적으로 3.9%)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¹⁵⁰⁾ PMC에 대해 적용되는 법인세율도 24%로 동일하다. PMC에 대한 과세 등 대우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¹⁾

<PMC에 대한 과세 등 대우>

- 협동조합 등기부: 기업 등기부와 별개로 협동조합 등기부가 존재함. 협동조합은 기업 이익부, 협동조합 등기부 2곳에 모두 등기됨. 협동조합 등기부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세제 혜택의 구분 적용을 위해
- 협동조합 등기부에 PMC와 non-PMC가 구분되어 등기됨¹⁵²⁾
- 비분할 적립금에 적용되는 잉여금에 대해 법인세 면제: 농수산 협동조합의 경우 연간 순이익의 77~80%, 노동자협동조합은 57%, 소비자협동조합은 32%까지만 비과세 가능¹⁵³⁾
- 법률에서 정한 협동조합 관련 서류 제출시 등록세, 인지세 면제
- 상호기금¹⁵⁴⁾에 불입되는 잉여금에 대한 세제 감면
- 조합원과의 거래와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구분기장하여야 함
-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이용실적환급은 손금산입,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비분할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함

149) 이를 '이익 없는 분배원칙'이라고 함. Fajardo, Gemma · A. Fici · H. Henry · D. Hiez · D. Meira · H. Munkner · I. Snaith, *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 Cambridge: Intersentia(2017), p. 43.

1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28> (최종검
 색일 2020.10.29.)

151) 박광동 외, 앞의 자료, p. 140-162.

152) Fajardo et al, 앞의 책, p. 395.

153) Fontanari, Eddi, Carlo Borzaga(2018), *Lapressione fiscale declinata per forma d'impresa. Un*

2003년 「민법」 개정 이전까지는 용어상으로 이용실적환급과 배당이 구별되지 않았지만, 개정을 통해 정관의 의무 기재사항 중에 이익(utili)의 분배와 환급금(ristorni)을 구별하도록 하고(동법 제2521조), 이용실적환급은 이용량이나 이용의 질에 비례하여 분배할 것을 규정하였다(동법 제2545조의6).¹⁵⁵⁾

참고로 PMC가 non-PMC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전환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다. 전환 조건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⁵⁶⁾

〈PMC의 non-PMC 전환 조건〉

- 보유하고 있던 비분할 적립금은 상호기금에 적립해야 함
- 2년 연속 non-PMC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하고
- 2년간 늘어난 자산은 모두 비분할 적립금에 적립해야하며
- non-PMC가 되는 시점에는 세제 혜택을 통해 축적된 자산 가치를 알기 위하여 자산 평가를 실시하여 자산 평가에 의해 가치가 변동된 자산도 모두 비분할 적립금에 적립
- non-PMC가 되는 시점에 비분할 적립금은 모두 상호기금에 적립해야 함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은 PMC일 때 받은 조세 감면의 결과가 non-PMC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혜택은 ‘사회적협동조합법’이라 불리는 「381/1991 법률」의 제7조,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381/1991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세제 혜택〉

- 기부나 상속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면제
- 주택 매입, 임대 계약시 등록세, 저당세의 25% 감면
-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을 위한 모기지론 대출 혜택
- 위의 혜택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율 제한, 잔여재산 분배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해당함
- 컨소시엄 회원의 70% 이상이 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 컨소시엄도 위의 혜택 받음

approfondimento sull'Italia, Euricse Working Papers 103-18, 6. 1977년 판둘피법(904/1977 법률)으로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게 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며 현행의 체제로 변경됨

154) 협동조합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상호기금(la promozione e lo sviluppo della cooperazione). 1992년 도입됨

155) 박광동 외, 앞의 자료, p. 161.

156) 박광동 외, 앞의 자료, p. 135.

3.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 눈여겨볼 점은 포르투갈의 법령체계는 Código와 Lei를 구분하는데, 민법, 상법, 형법 등은 Código로, 하위 법률들은 Lei로 구분하고, 협동조합법은 하나의 법전의 성격을 갖는 Código로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은 그 하위법으로 12개의 업종별 협동조합법을 포함하고 있다.¹⁵⁷⁾

포르투갈 협동조합법(Código Cooperativo)¹⁵⁸⁾에서는 협동조합을 ‘가변자본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협동 및 상호부조를 통해서, 또한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여 이윤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필요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 Meira(2019)는 이 정의는 협동조합 법인의 세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형식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의 가변성과 소유구조의 가변성, 둘째 실질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의 추구, 즉 영리추구가 아닌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의 충족, 셋째 협동조합 기업의 운영방식 - 협동조합 원칙 준수, 조합원들의 자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¹⁵⁹⁾

협동조합 조세에 대한 법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에 관한 과세우대 법령(Decreto-Lei 215/89)」(1989.7.1.)과 「사회연대특별기구규칙(172-A/2014)」(2014.11.14.) 등이 있다.¹⁶⁰⁾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 조세 제도를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포르투갈에서 특이한 점은 CASES라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독특한 공익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이 기구가 대행한다는 점이다. CASES는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지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제115조 제1항). 포르투갈 협동조합들은 매년 정관, 사업보고, 결산서 등을 CASES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16조), CASES는 매년 협동조합의 등기 상태 및 정상적인 운영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한다(제117조).¹⁶¹⁾

157) 박광동 외, 앞의 자료, p. 233.

158)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영문판

http://www.cases.pt/wp-content/upload/2018/04/CCOOP_2017.-EN.pdf

(최종검색일

2020.10.29.)

159) Meira, Deolinda,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학술행사, 한국 법제연구원. 2019.3.26.

160) CASES 웹사이트 참조 www.cases.pt (최종검색일 2020.10.30.)

161) 박광동 외, 앞의 자료, p. 239.

〈포르투갈 협동조합 조세 제도〉

- 조합원과의 거래와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구분기장.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어떤 경우에라도 조합원 및 투자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
- 농업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주택건설협동조합, 사회연대협동조합의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함
- 노동자협동조합 중 근로자의 75% 이상이 조합원인 경우(a),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75% 이상이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b) 법인세 면제함
- 교육 부문의 혼합협동조합의 경우 위 (b)의 산정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 수는 조합원수에서 제외함
- 법인세 면제 대상 협동조합은 스스로 면제 자격을 포기할 수 있음. 그 경우 5년 동안은 일반 법인세가 부과됨
-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 협동조합 조합원, 회원, 관련단체로부터 수납한 회비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법에서 정한 협동조합 기금에 적립하는 잉여금에 대해 법인세 산정시 120%까지 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 지방세의 한 종류인 고정자산세 면제
- 위 2개의 취득세와 고정자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의회 결정에 따라서 면제를 폐지하거나 면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단, 주택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의 고정자산세 면제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정할 수 없음(이 경우 매년 12월31일 거주자가 조합원임을 국세청에 증명해야 함)
- 협동조합은 각종 인지세를 면제함
- 이상의 세제 혜택은 협동조합연합회에도 적용됨

4. 스페인

스페인 협동조합법은 하나의 법률 속에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통칙(제1편 제1장~제9장)이 있고, 각 절(제1편 제10장 12개 절, 제11장 3개 절)에 업종별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개별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스페인도 이탈리아와 비슷하게 상업등기소와 별도로 협동조합 등기소가 있으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등기부에 등기된다. 단, 신용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등기소와 상업등기소에 모두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자유로운 탈퇴, 가입이 가능하며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구조 및 기능을 지니며 본 법률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필요 및 바람을 충족할 목적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기업’으로 정의한다(제1조 제1항).

Fajardo(2019)는 협동조합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결사체와도 구별되며 회사와도 구별되는 ‘상호협동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다. 협동조합은 인적단체로서 결사체와 많은 속성을 공유하지만 결사체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회사나 상사회사와 구별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협동조합은 출자자들과의 거래를 주사업으로 하며 원가경영에 입각하여 법인 자체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이 아닌 조합원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협동조합의 채무에 조합원이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²⁾

스페인은 1990년 협동조합 회계기준과 조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인세법 중 special tax scheme for cooperative groups에서 규정하고 있으며,¹⁶³⁾ 20/1990 법률(1990.12.19.)이 제정되었고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6년 12월 3일이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법에 규정된 조세 혜택이 있다.¹⁶⁴⁾

협동조합 회계기준(Spanish Accounting Standard for Cooperatives)은 2003년 Order ECO/3614/2003(2003.12.16.)이 제정되었고 2010년 Order EHA/3360/2010(2010.12.21.)로 발전되었다. 금융협동조합과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Bank of Spain과 General Agency of Insurance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Circular 4/201(2017.11.27.)을 따르고 있다.¹⁶⁵⁾

20/1990 법률은 위의 협동조합 조세특례가 따르는 원칙과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는 스페인 헌법 제129조¹⁶⁶⁾를 근거로 적절한 입법을 통해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조세특례가 따르는 원칙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162) Fajardo, Ghema, ‘타 기업형태와의 비교에서 본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 법인의 위상’,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학술행사, 한국법제연구원. 2019.3.26.

163)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3.12), p. 84.

164) 2011년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 이외의 조문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5년 개정시에 제9조에서 제12조에 걸쳐서 조세 혜택 규정이 명시됨

165) Polo-Garrido, Fernando·Maria del Mar Sánchez-Campos(2018.12.), Analysis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Cooperative Societies and Their Accounting Treatment in Spain, 「한국협동조합연구」 36(3), pp. 135-158.

166) 제2항 국가는 적절한 입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여야 한다

<스페인 협동조합 조세특례가 따르는 원칙>

- ①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 활동, 성격에 주목하여 협동조합 육성
- ② 다른 법제 및 세제와의 조화
- ③ 협동조합의 본질적 원칙(essential principles)의 인식
- ④ 세계적인 협동조합 세제의 일반 규정과의 조화
- ⑤ 세제 일반 규정은 보충적 위치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2 종류의 규범이 존재한다.

- ① 인센티브 규정: 제4편.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function)에 대한 세제 혜택 ex.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접근 지원, 수당(endowment)을 통한 적응(adaptation)과 훈련(training) 지원
- ② 조정된 기준: 제2편 제4장 “법인세 특별 규정(Special rules applicable to Corporation Tax)”, 제3편 조합원과 후원자(the partners and associates)에 대한 특별 규정. 협동조합에 특화된 규정

이 법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 ① 보호되는 협동조합 : 모든 협동조합
- ② 특별 보호되는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농수산업 협동조합, 소비자(이용자)협동조합, 토지개발(communitary exploitation land) 협동조합
- ③ 보호되지 않는 협동조합

보호되는 협동조합은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보호되는 협동조합의 자격 상실 요건>

- 의무적립금, 교육과 진흥 기금에 적립하지 않을 때
- 비분할 성격의 적립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했을 때
-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교육과 진흥 기금을 신청.사용했을 때
- 회계기준에 합치하지 않거나 출자금을 자본금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 허용된 이자율 이상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지급했을 때
- 이용실적환급이 이용실적비율대로 되지 않거나 비조합원에게 분배되었을 때
- 손실의 처리에 있어 총회, 정관, 법에 정해진 규정을 어기는 것
- 법에 정해진 조합원 개인의 출자 비율 혹은 후원자의 출자금 한도를 초과했을 때

-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아닌 법인에 출자 비율이 10% 초과할 때. 그러나 연관되었거나 보조적, 종속적 활동을 하는 법인에서는 40%까지 늘어날 수 있음. 투자액은 협동조합 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조합원 거래를 구분하지 않거나 비분할적립금에 적립하지 않거나 비조합원 거래량이 50% 초과시
- 특정 협동조합 유형에서 (조합원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 수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때
- 법에 정해진 최소 조합원 수 이하로 일정 기간 경과할 때
- 법에 정해진 최저 출자금 이하로 6개월 이상 경과할 때
- 2년 이상 활동이 없을 때
- 목적인 활동이 종료되거나 활동 불가능이 명확할 때
- 법에 정해진 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

이 법률은 협동조합의 과세표준 및 협동조합 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항목	내용
협동조합에서의 가치평가 (valuation of cooperative 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 협동조합의 거래는 시장가격(market value)으로 계산됨 • 소비자, 이용자, 주택협동조합의 경우는 예외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평가
과세표준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는 구분하여 과세표준 계산 • 협동조합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비조합원과의 거래, 자산 가치의 증감
협동조합 소득 (cooperative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 수행된 협동조합 거래(cooperative activity)의 결과 • 조합원이 지불한 회비(periodic fees) • 보조금, 지원금 •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수행된 자본 잉여금 • 법인이 다른 협동조합이나 연합 조직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환급금 • 협동조합 활동 관련 재정(treasury) 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재무 소득(financial income)

협동조합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extracorporative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 · 협동조합 아닌 회사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 · 협동조합의 목적 이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
특별 비용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에 의해 공급되거나 수행된 상품, 서비스, 노무는 설령 그보다 낮은 가격에 의해 행해졌더라도 시장가격으로 평가됨 · 교육과 진흥 기금에 적립되는 금액 ·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조합원, 연합조직의 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환급금(은행 이자율의 3%(조합원 출자), 5%(연합조직) 넘지 않아야 함)

이상의 기준에 의해 스페인 협동조합 조세 제도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p style="text-align: center;">〈스페인 협동조합 조세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20%,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25%) 적용(이차 협동조합도 동일 적용) · 노동자협동조합, 농수산업 협동조합, 소비자(이용자)협동조합, 토지개발협동조합 등의 법인세율은 10% · 협동조합이 4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협동조합과 동일한 세율(20%) 적용. 단, 자회사의 수익이 협동조합과 관련없고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는 표준세율(25%) 적용 · 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한 법인세율은 25% · 법정적립금의 50%는 손금산입 · 협동조합 교육과 진흥 기금 : 순이익의 5% 적립해야 함. 손금으로 인정 받음 · 조합원이 제공한 상품, 서비스의 가격은 설령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더라도 수익을 계산할 때는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계산됨 · 합병, 분할시 세제 혜택 있음 · 설립시 조합원의 1/2 이상이 실업 중인 장애인이며, 현재 조합원의 1/2 이상이 장애인인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후 5년간 과세대상액의 90% 공제 ·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 회계 	
---	--

- 이용실적환급을 회전출자하거나 총회에서 결의된 적립금에 귀속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음
- 설립 후 3년 이내 구입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 경제활동세 등의 지방세 감면
- 농협, 토지개발 협동조합 등은 재산세 감면

그 외 사회적경제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스페인 사회적경제법에서 정하는 조세 제도〉

- 실업자 또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회보험료 일부 환급(제9조)
- 실업보험금을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제10조)

추가로 교육과 진흥 기금 요건에 대한 사항을 한번 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교육과 진흥 기금 요건〉

- 교육과 진흥 기금 적립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잉여금의 30% 초과할 수 없음
- 계획에 의해 확정된 금액은 그 해안에 납부되어야하며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부채로 기록됨
-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면 그 해의 소득으로 계상됨
- 기금을 지원받고, 사용하는 손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Ⅲ. 나오며

이상에서 4개 국가의 협동조합 조세 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나라들은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비해 오래전부터 발전해왔던 국가들이기도 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의 저자들이 협동조합 법제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로 뽑은 나라들이기도 하다. 김완석 외(2012), 손원익 외(2013)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의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들 사례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협동조합 조세 제도의 원칙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surplus)을 영리회사의 이익(profit)과 구분한다는 것이다. 조세 제도로 표현될 때는 이용량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환급하는 것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조합원의 필요충족이라는 협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Packel(1941), 최순우(1983), Aguiar(2018) 등의 논리에 따르면 협동조합 잉여금 자체가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해 환급되어야 할 초과분의 성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뜻에 의해 내부유보 될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제3원칙은 자본 참여 및 비분할자본의 축적을 정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환급될 잉여금을 이 원칙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부유보한 잉여금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협동조합 잉여금이란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사례를 보면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비분할적립금에 적립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협동조합 조세 제도는 법인 형식에 종속되지 않고 실제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도 이들 국가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조합원과의 거래량, 민주적 거버넌스 등 이들 국가들은 협동조합 조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다.

다섯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는 협동조합 자본의 가변성을 법에서 인식하여,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른 출자금의 변동을 정관이나 등기에 기재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상의 원칙들을 우리나라 협동조합 조세 제도에 적극 반영할 때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유성에 적합한 조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완석·심태섭(2012),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12(2), pp. 7-40
2. 박광동·김형미·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히로타 야스유키(2019),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 손원익·송은주·홍성열(2013),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4. 이한우(2014),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7(2), pp. 371-404
5. 임영선(2014),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6. 최순우(1983), 협동조합의 법인세부과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1(1), pp. 47-61.
7. Aguiar, N.(2018), *Taxation of Cooperatives: General Guidelines and Problems*, 번역협동조합 옮김(2019), 「협동조합 과세: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8. Fajardo, G. · A. Fici · H. Henry · D. Hiez · D. A. Meira · H. Muenker · I. Snaith(2017),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s*, Intersentia.
9. Fajardo, Ghema, '타 기업형태와의 비교에서 본 스페인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 법인의 위상',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학술행사, 한국법제연구원. 2019.3.26.
10. Fontanari, Eddi · Carlo Borzaga(2018), *Lapressione fiscale declinata per forma d'impresa. Un approfondimento sull'Italia*, Euricse Working Papers 103-18.
11. Fredrick, Donald A.(2013), Income Tax Treatment of Cooperatives - Background (2013 Edition), USDA, *Cooperative Information Report* 44, part 1.
12. Mayer, Bruce · Peg Nolan · Steve Wolfe, *Accounting Best Practice for Food Coops*, National Cooperative Grocers Association.
13. Meira, Deolinda,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체계의 특징과 그 영향', 「협동조합법의 최신 흐름과 시사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협동조합법」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학술행사, 한국법제연구원. 2019.3.26.
14. Packel, Israel(1941), Cooperatives and the Income Tax, *University of Pencylvania Law Review*, pp. 137-155.
15. Polo-Garrido, Fernando · Maria del Mar Sanchez-Campos(2018.12.), Analysis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Cooperative Societies and Their Accounting Treatment in Spain, 「한국협동조합연구」 36(3), pp. 135-158.

해외 법령

스페인 협동조합법 Ley 27/1999, de 16 de julio, de Cooperativas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99-15681> (2019. 11. 3. 최종확인)

이탈리아 민법

<http://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regio.decreto:1942-03-16:262>

(최종검색일 2020.10.29.)

포르투갈 협동조합법 영문판

http://www.cases.pt/wp-content/upload/2018/04/CCOOP_2017.-EN.pdf (최종검색일

2020.10.29.)

참고 웹사이트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28>

(최종검색일 2020.10.29.)

CASES 웹사이트 참조 www.cases.pt (최종검색일 2020.10.30.)

University of Wisconsin-Medison Center for Cooperatives 웹사이트:

<https://uwcc.wisc.edu/resources/grocery/> (최종검색일: 2020.11.2.)

토론문

협동조합 조합원거래의 성격과 세제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I. 발제 요약

저는 유종오 회계사님의 발제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1. 영리법인의 거래는 주로 영업성, 영리성을 띠는 것으로 그 구성원과 거래는 거의 없는데
 - 일부 자본거래가 있더라도 이는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 반해, 협동조합의 거래는 주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합원의 효용을 위한 것으로 영리성, 영업성이 없다(물론 협동조합과 비조합원간의 거래는 영리법인의 거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영리법인이 독자성을 가진 단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오히려 조합원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 성격이 강하다. 비록 거래의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협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에서 생기는 잉여를 영리법인의 잉여와 같은 것으로 보면 안된다.
2.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 거래는 조합 스스로의 소득(이윤)추구나 유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상의 필요에 따른 후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에 발생한 잉여는 일시적이거나 유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의 잉여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라 볼 여지가 적으므로 차라리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잉여 또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우리나라 세법은 개별법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에게 각각 과세특례를 주고 있다. 그런데,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은 일부 부수적인 차이 외에 본성이나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므로 기본법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다. 외국에서도 협동조합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일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도 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고, 그것을 갖춘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해

서는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말고, 이용고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비분할적립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손금을 허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한다.

II. 몇 가지 첨언할 점

저는 유종오 회계사님의 자세한 논증과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논의를 더 풍부히 하기 위해 몇가지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우리 법상 기본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법인이 얻은 잉여를 그 구성원(조합원, 주주 등)에게 배당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이유입니다. 문제는 개별법 협동조합에 대해 근거법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영리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예: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 -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치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이 영리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개별법 협동조합의 해당 문구들을 “영업활동”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이러한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를 거래 및 조직의 성격에서 근거를 찾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즉, 개별법 협동조합도 일반 비영리법인이어서 여러 과세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조합원가의 거래가 중심이라는 점, 기타 여러 정책적 관점 등을 이유로 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면, 기본법 협동조합도 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3. 한편,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 혜택을 주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시행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51조의 2).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그 자체의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도관(Conduit 또는 Pass through)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극 적용한 사례입니다. 물론 일종의 Paper company 들이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협동조합은 위에서 보았듯이 그 자체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도구로서의 조

직 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도 많습니다. 협동조합도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LLC 사례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4.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법률적인 관점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실질과세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점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협동조합과는 무관한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신탁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실질과세 원칙에는 반합니다. 그런데,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자니, 실제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래 종류도 다르다 보니 여러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용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여 둡니다. 끝.

협동조합 비분할적립금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문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

1.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비분할적립금

협동조합은 수요자들이 스스로의 수요를 연대라는 방식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벗어나 영리성을 첫번째 목표로 하게 된다면, 당초의 협동조합 이념은 몰각되고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선언한 협동조합원칙들도 무시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지분 제한이 있는 영리기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또는 ‘협동조합의 영리성’이라는 주제로 주로 논의되는데, 비조합원 거래의 취급방법이나 비분할적립금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가 있다.

‘영리(營利)’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 개념으로서의 영리성은 상법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⁶⁷⁾ 이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회사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영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되고, 나아가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이익분배설’이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¹⁶⁸⁾ 단순히 대외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요소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분배설에 의하면, i) 대외적인 수익활동과 ii) 대내적인 수익분배가 영리성의 핵심적 지표가 된다. 먼저 협동조합의 사업이 i) 대외적인 수익활동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단체 내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단체 밖의 불특정 다수까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비조합원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허용하며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한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일차적인 사업목표로 두고 있는바, 대외적인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¹⁶⁹⁾

한편 ii) 대내적인 수익분배라는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결국 협동조합에서 배당이 가능하

167) 상법 제169조.

168) 정동윤 외, 주식 상법 제5판, 79.

169) 이와 관련하여 주식 상법에서도 “협동조합이나 상호보험회사와 같이 대외적인 영리활동이 아닌 단체 내부적 활동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것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정동윤 외, 위의 책, 80).

는 사실이 문제된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배당의 상한을 규정하며¹⁷⁰⁾ 애초에 주식회사 등 영리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이윤배당과는 다른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원가경영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배당이란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수요 충족을 위해 추가부담했던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자배당의 경우에는 출자금의 실질평가액 감소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조합원과의 거래도 함께 영위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면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 대외적으로 수익활동을 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제상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추가부담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보기 어려워 ii) 대내적인 수익분배를 하고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해당 협동조합이 영리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단체의 영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이익분배설’에 의하더라도, 대외적인 수익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대내적으로 자본투자에 대한 이윤배당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단순한 영리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협동조합의 전체 사업 중 비조합원 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법인 성격은 영리(조합원 거래 부분)와 비영리(비조합원 거래 부분)가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조합원 거래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영리적 가능성은 향후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협동을 방해하고 협동조합이 이윤추구 집단으로 악용될 위험으로 옮겨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영리성의 근간이 되는 비조합원 거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제정법과 같이 비조합원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의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미 개정된 내용에 관한 회귀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발제문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그리고 이미 다른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방식에 따라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170)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

2. 세제 지원의 전제로서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협동조합의 영리성 논쟁을 종식하고 협동을 촉진하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당할 수 없도록 취급하는 형태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발제문에서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따라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의 전제로서 협동조합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정관에 의한 제한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세제혜택의 부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허용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거래에 대한 취급을 법률상, 회계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비분할적립금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잉여의 일부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¹⁷¹⁾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 방법을 전적으로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¹⁷²⁾ 법정적립금도 해산시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바, 현행법상의 법정적립금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비분할적립금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경리를 하는 기준과 공통 재산의 안분방법,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취급방법 및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재원, 적립비율, 활용방법, 법정적립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주요국의 법령내용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구분경리의 경우 법률보다는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인 안분기준을 다루어야하므로 협동조합 회계기준의 도입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기본법의 수준에서 협동조합의 중간법인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만 비로소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의 논의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세제지원 형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상호저축중앙은행회의 구조개선적립금 등 다른 적립금·준비금 관련 세제지원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도 법인세제상 손금인정방식을 통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발제문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대상에 협동조합을

171) 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

172) 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 제1항.

포함하는 안(1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협동조합의 비분할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는 안(2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안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배당되지 않고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으로 다시 지출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은 대부분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게다가 법인세법 시행령은 수익사업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으로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시행령 제56조 제5항), 수익사업을 하는 일반협동조합에 적용되기는 적절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분할적립금의 적립금액에 비례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비분할적립금의 적립을 장려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2안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정관을 통한 배당제한이나 잔여재산분배를 제한하는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결국 개별 조합이 비분할적립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법령에 비분할적립금의 정의나 적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안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한 세법 개정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사전에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비분할적립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과세제도 적용에 관한 의견

이선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 들어가며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포럼의 제목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면,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아니며, 협동조합에 특성을 고려한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발제문의 내용 및 취지, 결론에 동의한다. 다만 조금 더 쟁점을 구체화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일반협동조합¹⁷³⁾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현행 법제 관련

우리나라의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¹⁷⁴⁾ ‘영리성’에 관한 상법의 통설인 ‘이익분배설’에 의하면, 비조합원 거래에 관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은 영리성을 갖는 영리법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¹⁷⁵⁾

우리 법원은 개별법상 협동조합¹⁷⁶⁾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의 단기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5조)”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제6조 제1항, 제2항), 김■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그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배당하여 영리성을 갖는 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법률에 의하여 영리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173)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174)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0), 25면.

175) 정순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언”, 공익과 인권 제19호 (2019), 257면.

176)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 호의 8가지 협동조합법인을 의미한다.

일반협동조합은 개별법상 협동조합¹⁷⁷⁾과 달리 영리성을 부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사회적협동조합만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두 유형을 다른 법인형태로 취급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 더욱이 일반협동조합은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달리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고,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모히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하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1항). 즉,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하면 ‘상인’인 유한책임 회사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상법 규정이 일반협동조합에도 적용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입법자가 사실상 일반협동조합을 상법상 ‘상인’으로 전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⁸⁾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제는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일반협동조합에 바로 당기순이익과세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3. 협동조합과 비조합원과의 거래 관련

협동조합의 특징은 ‘이용자 소유회사’로 일반 회사와 구별된다는 점이다. 즉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용자이자 소유자이다. 그런데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비조합원과의 거래로 인한 잉여금까지 조합원 배당에 사용된다면 이는 조합원 입장에서 사실상 투자수익이 된다.¹⁷⁹⁾

유럽 주요국 협동조합법에서는 많은 경우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 회계 의무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 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은 협동조합이 비조합원과 거래할 수 있으며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별도 계정에 기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ection1.5).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1.5장 비조합원 거래

177) 발제문 4쪽에 있는 9가지 협동조합법인을 의미한다.

178) 김용진·김형미·최은주·신창섭·이태영·김재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20), 233면.

179) 김용진 외, 위의 글, 346면.

- (1) ‘비조합원 거래’란 협동조합과 비조합원 사이에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재화, 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하는 거래이다.
- (2) 협동조합은 정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비조합원과 거래할 수 있다.
- (3) 비조합원과 거래하는 협동조합은 그들에게 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을 알릴 것이다.
- (4) 협동조합이 비조합원과 거래를 할 때는 그 거래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 (5) 비조합원 거래에서 나오는 이익은 비분할적립금에 적립된다.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일반 주식회사의 잉여금 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조합원 거래와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구분 회계가 가능해진다면 장기적으로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영리법인과 유사하게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조합원 거래의 구분회계를 감안했을 때에도 당기순이익과세제도가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 이용고 배당의 손금산입제도 관련

당기순이익과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정상적인 세무조정 의무를 부담하고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¹⁸⁰⁾

일반협동조합의 이용고 배당은 주식회사의 배당과 다르게 가격의 사후조정으로 원칙상 협동조합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고배당금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¹⁸¹⁾ 장차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선 과제이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과세제도와 이용고 배당의 손금산입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와 형평성 측면의 문제제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고 배당의 손금산입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제기될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80) 전병목,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9면.

181) 이병대·김완선·서희열,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5), 57면.

5. 맺으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필요와 염원에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단순히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없다. 협동조합을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아닌 제3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과세체계는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아무런 세제상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인정한다면,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과세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에 대해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일반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과세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